

바람직한 부산!
혁신하는 의회!

2019. 시민 체감형 정책 구상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 · 분석용역
결과보고서**

2019.12.



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제 출 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9 시민 체감형 정책 구상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분석』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주식회사 세상모든소통연구소
대표 이아실

목차

1. 연구 개요	01
2. 전문가 의견조사	05
1. 설문조사 개요	07
2. 설문조사 결과	08
3 전문가 FGI 조사	25
1. 조사 개요	27
2. 종합 결과	28
3. 정책분야별 주요결과	70
4. 결론 및 시사점	99

표 목차

〈표 1〉	민선7기 비전으로 시정 운영 평가에 대한 응답 결과	08
〈표 2〉	정책결정과정에 유목화된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	09
〈표 3〉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10
〈표 4〉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11
〈표 5〉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12
〈표 6〉	정책 평가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13
〈표 7〉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영역에 대한 자유 의견	15
〈표 8〉	부산광역시의회 정책 평가를 비롯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평가의 응답 결과	16
〈표 9〉	부산광역시의회 역할에 대한 자유 의견	17
〈표 10〉	시의회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자유 의견	18
〈표 11〉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자유 의견	19
〈표 12〉	초당적 입장 유지에 대한 자유 의견	20
〈표 13〉	지향해야 할 정책 평가 관점에 대한 자유 의견	22
〈표 14〉	시와 시의회의 협치에 대한 자유 의견	23
〈표 15〉	시의회의 기대 역할에 대한 자유 의견	24
〈표 16〉	FGI 조사 참석자	27
〈표 17〉	경제·문화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35
〈표 18〉	복지·환경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3
〈표 19〉	기획·행정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9
〈표 20〉	교육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56
〈표 21〉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60
〈표 22〉	해양·교통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66

그림 목차

[그림 1]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관심 있는 정책 분야)	07
[그림 2]	민선7기 비전으로 시정 운영 평가	08
[그림 3]	부산광역시의회 정책 평가를 비롯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평가	16
[그림 4]	경제·문화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35
[그림 5]	복지·환경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3
[그림 6]	기획·행정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9
[그림 7]	교육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56
[그림 8]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60
[그림 9]	해양·교통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66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지금까지의 부산광역시 민선 7기 정책에 대해 평가 가능한 기초자료 활용
- 향후 시민 체감형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분야별로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도출 및 개선 가능한 방안 모색

2 조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민선7기 정책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시민 체감형 정책 운영과 전문가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음.
- 연구방법은 전문가들의 생생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섭외를 진행하기 앞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질적연구방법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6번에 걸쳐 실시. FGI는 매회 2시간~2시간 반 정도 진행하였음.
- FGI는 연구자의 판단 중지를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진행.

3 결과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중의 하나인 Giorgi(1970, 2003)의 현상학(phenomenology)을 기초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정리하여 결론 및 제언 도출.

전문가 의견조사

I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FGI에 앞서 부산광역시 시정운영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간단하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크게 민선7기 비전 하의 시정운영 평가와 부산광역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정책 평가에 있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역할에 있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기본 정보로 그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설문하였다. 여기서 정책 분야는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75명 중 28.0%에 해당하는 21명이 그들의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복지·환경 분야’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문화 분야(16명, 21.3%), 도시·안전 분야(14명, 18.7%), 교육 분야(11명, 14.7%), 해양·교통 분야(8명, 10.7%), 기획·행정 분야(5명,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관심 있는 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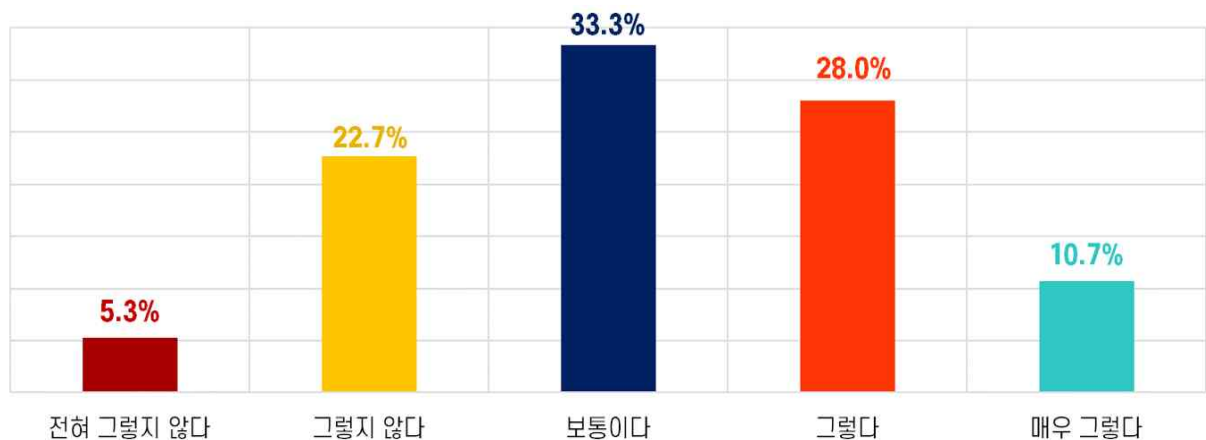


II 설문조사 결과

1.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으로 시정 운영 평가

민선7기 출범 이후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하에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집단 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집단은 5.0 만점에 3.16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못 미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민선7기 비전으로 시정 운영 평가



〈표 1〉 민선7기 비전으로 시정 운영 평가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	17	25	21	8	75	3.16
	5.3	22.7	33.3	28.0	10.7	100.0	

2.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전문가집단 7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된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따라 유목화한 결과는 <표 0>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의견’이 전체 의견 119건 중 31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타(정책 아이디어)’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정책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28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견(17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의견(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책결정과정별로 유목화된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

순위	공동 영역	빈도
1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의견	31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견	17
3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의견	13
4	정책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28
5	기타(정책 아이디어)	30
합계		119

정책결정과정 단계별로 자유 의견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은 ‘시민과의 소통’이 전체 31건 중에서 12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이 공감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반영 필요’가 7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나머지 의견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과정 및 방법 명확화(5건)’,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중요(3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장기적 플랜 수립(2건)’, ‘문화역사 공간의 보존 및 활용(1건)’, ‘문화예술의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필요(1건)’ 등의 응답을 보였다.

〈표 3〉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시민과의 소통	12
시민이 공감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반영 필요	7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과정 및 방법 명확화	5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중요	3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장기적 플랜 수립	2
문화역사 공간의 보존 및 활용	1
문화예술의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필요	1
합계	31

둘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의견 수렴 후 전문가 분석’과 ‘정책결정구조의 개방성과 전문성 필요’, ‘충분한 예산 반영’이 전체 17건 중에서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과감한 체감형 정책 전환’, ‘과다한 예산 투입 지양’, ‘미래지향적 정책 구상 필요’, ‘부산의 지리학적 특성을 살려 지속적 정책 필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소지역 단위의 소규모 사업 추진’, ‘시장의 리더십’, ‘시정에서 우선해야 할 것을 파악하고 완전히 수정해야’, ‘어업권의 보호에 치중하기 보다 전체 이용을 살피는 방향성 제고 필요’, ‘언론과 여론을 의식한 단발성 정책 지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 퇴보 또는 중단되는 사례 존재’ 의견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표 4〉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시민 의견 수렴 후 전문가 분석	2
정책결정구조의 개방성과 전문성 필요	2
충분한 예산 반영	2
과감한 체감형 정책 전환	1
과다한 예산 투입 지양	1
미래지향적 정책 구상 필요	1
부산의 지리학적 특성을 살려 지속적 정책 필요	1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1
소지역 단위의 소규모 사업 추진	1
시장의 리더십	1
시정에서 우선해야 할 것을 파악하고 완전히 수정해야	1
어업권의 보호에 치중하기 보다 전체 이용을 살피는 방향성 제고 필요	1
언론과 여론을 의식한 일회성 단발성 정책 지양	1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 퇴보 또는 중단되는 사례 존재	1
합계	17

셋째,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정책 홍보 및 전략 실천’이 전체 13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시성·선심성 행정(정책) 지양’이 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나머지 의견으로는 ‘관련 기관 전문성 확보’, ‘대 시민 연령·직능별 홍보 및 참여 독려’, ‘정치이념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 및 추진체계 필요’, ‘해양수도에 부합되는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부 지원’ 의견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표 5〉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지속적인 정책 홍보 및 전략 실천	7
전시성·선심성 행정(정책) 지양	2
관련 기관 전문성 확보	1
대 시민 연령·직능별 홍보 및 참여 독려	1
정치이념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 및 추진체계 필요	1
해양수도에 부합되는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부 지원	1
합계	13

넷째, ‘정책 평가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시민 의견 청취 가능한 플랫폼 및 시스템 마련’이 전체 28건 중 12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심층 의견 수립’이 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아래로부터의 의견 시스템, 환류 체계의 구축’, ‘전체 틀에 맞추어 시민이 체감 가능한 내용에 적절한 객관적 데이터 정리 필요’, ‘정책 관련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성과 파악 및 피드백 수립’의 건이 각각 2건의 응답을 보였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시의회 점검단 활동’, ‘정책실행 시 명예시민집행관 제도를 도입하고 홍보’, ‘체감 결과에 따른 비전 제시 및 구현’, ‘파악된 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 전략 수립’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표 6〉 정책 평가과정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시민 의견 청취 가능한 플랫폼 및 시스템 마련	12
정책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심층 의견 수립	4
아래로부터의 의견 시스템, 환류 체계의 구축	2
전체 틀에 맞추어 시민이 체감 가능한 내용에 적절한 객관적 데이터 정리 필요	2
정책 관련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2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성과 파악 및 피드백 수립	2
시의회 점검단 활동	1
정책실행 시 명예시민집행관 제도를 도입하고 홍보	1
체감 결과에 따른 비전 제시 및 구현	1
파악된 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 전략 수립	1
합계	28

마지막으로 ‘기타(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 생활 밀착형 사업 필요’, ‘시민이 해양자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유 수면 이용 다양화’, ‘해양산업구조 고도화’ 의견이 전체 30건 중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MICE 사업 육성’, ‘Tri-port 체제 구축’, ‘가덕도 국제공항 추진’, ‘걷기 좋은 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지속 추진’, ‘공무원들은 엄청 바쁘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므로 시정조직 재점검 필요’, ‘교육과정에 해양 관련 과목 및 특강 적극 추진’, ‘국제적 해양도시 수준에 이르기에는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움’,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도시 위상 강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민생활 안전,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 등 서민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 ‘북항로 부산항 및 워터프론트 벨트 재구축’, ‘삼락둔치의 맹꽂이시민습지공원,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인 생태공간 조성 및 람사르 가입에 대한 공약 이행’, ‘시민의 해변 접근성 제고’, ‘역사와 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위한 환경 조성’,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관광정책과 교통난을 위한 대책 마련’, ‘접근성이 편리한 평지형 공원 조성’,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문제 진단’,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문제 진단’,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현’, ‘지역별 경제 및 건강 격차 줄이기’, ‘철로 지하화와 지상공간의 공공적 활용’, ‘청장년 실업대책을 위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해양 수산 관련 이벤트 홍보 확대’ 의견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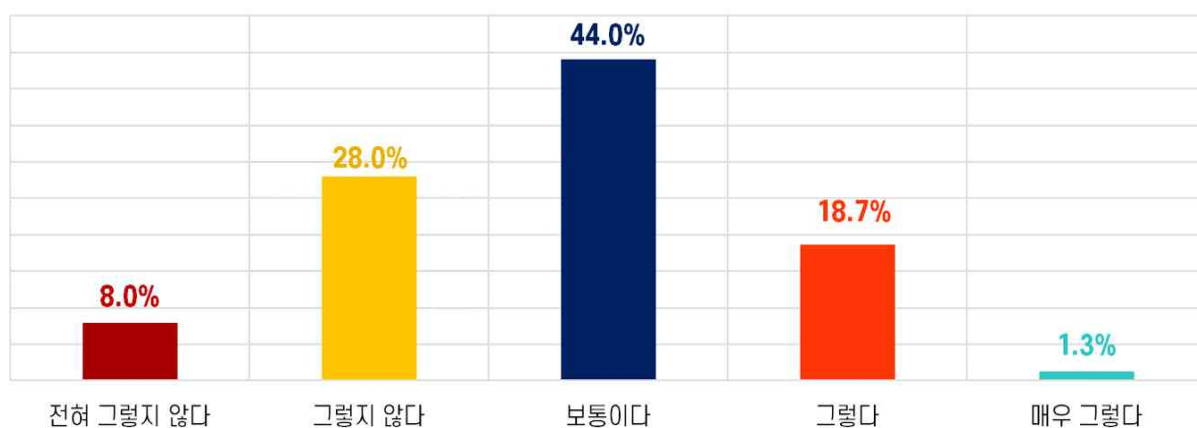
〈표 7〉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영역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서민 생활 밀착형 사업 필요	2
시민이 해양자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유 수면 이용 다양화	2
해양산업구조 고도화	2
MICE 사업 육성	1
Tri-port 체제 구축	1
가덕도 국제공항 추진	1
걷기 좋은 도시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지속 추진	1
공무원들은 엄청 바쁘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므로 시정조직 재점검 필요	1
교육과정에 해양 관련 과목 및 특강 적극 추진	1
국제적 해양도시 수준에 이르기에는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움	1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도시 위상 강화	1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민생활 안전, 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 등 서민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	1
북항로 부산항 및 워터프론트 벨트 재구축	1
삼락둔치의 맹꽂이시민습지공원,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인 생태공간 조성 및 람사르 가입에 대한 공약 이행	1
시민의 해변 접근성 제고	1
역사와 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위한 환경 조성	1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관광정책과 교통난을 위한 대책 마련	1
접근성이 편리한 평지형 공원 조성	1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문제 진단	1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현	1
지역별 경제 격차 및 건강 격차 줄이기	1
철로 지하화와 지상공간의 공공적 활용	1
청장년 실업대책을 위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1
해양 수산 관련 이벤트 홍보 확대	1
합계	30

3. 부산광역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부산광역시의회의 정책 평가를 비롯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문가집단 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집단은 5.0 만점에 2.77점으로 부산광역시의회의 정책 평가를 비롯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해 다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부산광역시의회의 정책 평가를 비롯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평가



〈표 8〉 부산광역시의회의 정책 평가를 비롯한 견제·감시 역할에 대한 평가의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6	21	33	14	1	75	2.77
	8.0	28.0	44.0	18.7	1.3	100.0	

4. 정책 평가 관점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변화에 대한 자유 의견

정책 평가에 있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역할에 있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전문가집단 7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된 의견을 유목화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전체 의견 88건 중 29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19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초당적 입장 유지(12건)’, ‘지향해야 할 정책 평가 관점(11건)’, ‘시와 시의회의 협치(9건)’, ‘시의회의 기대역할(8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부산광역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유 의견

순위	공통 영역	빈도
1	시의회의 전문성 확보	29
2	시민과의 소통	19
3	초당적 입장 유지	12
4	지향해야 할 정책 평가 관점	11
5	시와 시의회의 협치	9
6	시의회의 기대역할	8
합계		88

첫째, ‘시의회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모를 상황’이 문제인 것 같으므로 의회의 정책 평가가 시민의 공감하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 전체 29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시의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조언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풀 확대·운영’이 각각 7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평가와 대안제시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2건)’, ‘전문자문의원제도 활성화(2건)’, ‘의회 기능을 강화할 전문기관 설립(1건)’, ‘민간 평가단 자문 및 연구용역을 적극적 활용(1건)’, ‘정책 검증이나 궤도 전문화 필요(1건)’ 등의 응답을 보였다.

〈표 10〉 시의회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모를 상황이 문제인 것 같으므로 의회의 정책 평가가 시민의 공감하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시의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	7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조언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풀 확대·운영	7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평가와 대안제시를 위해 연구하는 의회	2
전문자문의원제도 활성화	2
의회기능을 강화할 전문기관설립	1
민간 평가단 자문 및 연구용역을 적극적 활용	1
정책 검증이나 궤도 전문화 필요	1
합계	29

둘째,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이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일정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이 전체 19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시민들과 소통-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과 공유’가 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담겨진 실질적인 정책 필요(4건)’, ‘시민의 실질적 의견 수렴(3건)’ 등의 응답을 보였다.

〈표 11〉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시민이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일정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7
시민들과 소통-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과 공유	5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담겨진 실질적인 정책 필요	4
시민의 실질적 의견 수렴	3
합계	19

셋째, ‘초당적 입장 유지’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객관성과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되지만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각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정 정당에 의존하지 않도록 부산 정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가 전체 12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정당 지향성을 배제한 초당적 자세 필요’가 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경청 및 편향적 시각에서 자유로워야 함(1건)’, ‘시의회는 정치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함(1건)’, ‘정치 지향적이거나 예산 나누기식이 아닌 부산의 큰 정책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 공공적 사업 추진 우선(1건)’, ‘정치적 진영논리 배제한 지역 경제 우선 정책(1건)’ 등의 응답을 보였다.

〈표 12〉 초당적 입장 유지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객관성과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되지만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각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특정 정당에 의존하지 않도록 부산 정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필요	3
정당 지향성을 배제한 초당적 자세 필요	2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경청 및 편향적 시각에서 자유로워야 함	1
시의회는 정치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함	1
정치 지향적이거나 예산 나누기식이 아닌 부산의 큰 정책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 공공적 사업 추진 우선	1
정치적 진영논리 배제한 지역 경제 우선 정책	1
합계	12

넷째, ‘지향해야 할 정책 평가 관점’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수립 필요성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최적성 및 결과평가가 적확성 차원에서 다뤄야 함’이 전체 11건 중 2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예산 정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보완점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보완점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를 응용한 정책 평가 실시’, ‘시의원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예산제도 지양’, ‘정책실행 전달체계의 실제적·전문적 실행에 대한 형성적, 총괄적 평가의 고려’, ‘정책실행 전달체계의 실제적·전문적 실행에 대한 형성적·총괄적 평가의 고려’, ‘정책성과 평가와 그 과정의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평가’, ‘정책 수립의 적절성, 정책 시행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주요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의 비용대비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의견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표 13〉 지향해야 할 정책 평가 관점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정책 수립 필요성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최적성 및 결과평가가 적확성 차원에서 다뤄야 함	2
예산 정비	1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보완점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1
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를 응용한 정책 평가 실시	1
시의원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예산제도 지양	1
정책실행 전달체계의 실제적·전문적 실행에 대한 형성적·총괄적 평가의 고려	1
정책성과 평가와 그 과정의 공정성을 구체적으로 평가	1
정책 수립의 적절성, 정책 시행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주요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	1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1
정책의 비용대비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1
합계	11

다섯째, ‘시와 시의회의 협치’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로드맵에 따른 정책 수립 결정 및 홍보’가 전체 9건 중 2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함(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 ‘내부적 평가만이 아닌 외부적 홍보와 중앙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위한 노력’, ‘도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확정’, ‘시와 협력하여 구체적 성과 도출 필요’,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정부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대변’, ‘정부의 정책을 따르기보다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정책 필요’ 의견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표 14〉 시와 시의회의 협치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전체 로드맵에 따른 정책 수립 결정 및 홍보	2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함(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	1
내부적 평가만이 아닌 외부적 홍보와 중앙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위한 노력	1
도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확정	1
시와 협력하여 구체적 성과 도출 필요	1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1
정부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대변	1
정부의 정책을 따르기보다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정책 필요	1
합계	9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기대 역할’에 대한 자유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필요’가 전체 8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실무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여야 함’, ‘방만행정 규제’, ‘부산시의 예산집행 대한 관리 강화’, ‘행정 영역이므로 정책 추진 단계의 세부사항에 관여하지 말 것’, ‘시민 체감형 시의회의 역할 필요’ 의견이 각각 1건의 응답을 보였다.

〈표 15〉 시의회의 기대 역할에 대한 자유 의견

응답 내용	빈도
입법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필요	3
실무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여야 함	1
방만행정 규제	1
부산시의 예산집행 대한 관리 강화	1
행정 영역이므로 정책 추진 단계의 세부사항에 관여하지 말 것	1
시민 체감형 시의회의 역할 필요	1
합계	8

전문가 FGI 조사

I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전문가의 심층적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FGI는 대표적인 정성조사 기법으로, 소수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자 혹은 전문 Moderator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개인의 반응을 통합 관찰/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FGI는 소수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량조사와 같은 대표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수치나 지표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나 현상에 대한 질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참석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 생생한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FGI 참석자들이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FGI조사의 대상은 부산지역의 대학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문화, 복지환경, 기획행정, 교육, 도시안전, 해양교통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여기서 6개 분야는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6〉 FGI 조사 참석자

분야	세부 내용
경제문화	A-1(교수), A-2(교수), A-3(전문가), A-4(교수), A-5(전문가), A-6(전문가)
복지환경	B-1(교수), B-2(교수), B-3(교수), B-4(교수), B-5(교수)
기획행정	C-1(교수), C-2(교수), C-3(교수), C-4(교수), C-5(교수)
교육	D-1(교수), D-2(교수), D-3(교수), D-4(교수), D-5(교수), D-6(교수)
도시안전	E-1(교수), E-2(교수), E-3(교수), E-4(교수), E-5(교수), E-6(교수)
해양교통	F-1(전문가), F-2(전문가), F-3(전문가), F-4(교수), F-5(교수), F-6(교수)

II 종합 결과

1. 슬로건으로 본 부산의 시민 체감 정도

1) 추상적인 슬로건, 그러나 비전 및 추진과제는 구체적으로

민선7기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슬로건은 추상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역 특성화 기업 지원이 아닌 추상적인 용어만 사용해서는 이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제조라든지 보건정신, 위생, 고령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늘 소외됩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추상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그 밑에 도시 목표가 각 분야 별로(B-5, 교수).

우리가 지역에서 사라진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직장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전부 다 수도권 위주로 삶을, 경제를, 언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의 영향력은 진짜 이만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부산일보나 국제일보를 전적으로 밀어주고, 뭐든 정보를 그쪽으로 준다든지, 또 부산에 삼강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이번에 출시된 부산 라면처럼 부산 아이스크림, 부산 두부 공장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부산 우유를 우리가 더 많이 사 먹어주면 부산이 행복한 게 될 텐데 그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은 대해서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늘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상한 용어들만 들이대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행복하게 하겠다. 저는 선뜻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B-1, 교수).

이렇게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가 되는 게 추상적인 게 맞는 것인지, 발바오처럼 구겐하임 뮤지엄을 하나 딱 들여놔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정책 그 하나만 쓴 거거든요. 근데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시 정책을 이렇게 추상적 용어를 써서 늘 가는 것이 맞는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도시 부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아이টে를 짤 때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콘텐츠 하나 없이 제목만 추상적으로 잡으니까(B-1, 교수).

또한, 비전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슬로건이란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기대감과 체감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민선7기가 내세우는 슬로건은 식상한 표현을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전략·전술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뿐더러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짧은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되었다. 결국, 선언적인 부분에 그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그걸 딱 들었을 때 3가지 단어가 저한테 딱 와닿았거든요, 행복, 해양, 그다음에 수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는 뭐 어떤 정치세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미션, 비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됐다, 못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느냐, 그 다음에 해양수도를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참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딱 생각하면 민선7기 들어와서 그냥 공항 얘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공항에 올인하면 부산이 부산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해양을 위해서 저는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부산 앞바다는 부산시민 거다, 부산 거다? 아니거든요. 해수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부산항만청 같은 경우에도 북항 재개발하는 것도 부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거든요. 이제 겨우 옛날 해수부 장관 때문에 부산이랑 같이 협의하는 거지만, 해수부 땅이거든요. 바다도 해수부 거고. 부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든지, 관리권을 부산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해양을 위해서, 수산이 아닌 해양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성을 제시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행복, 해양수도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A-4, 교수).

네, 취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북아의 해양도시로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시민이 행복한, 그리고 시민의 일상에서 느끼게끔 하겠다는 방향이나 뜻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표현 자체가 좀 식상한 거 같고 아직 그 슬로건을 실감하기엔 기간이 짧아서 그렇겠지만 아직 ‘시민이 행복한’이라는 앞의 수식어가 아직 실감하기엔 기간도 짧고, 아직 성과가 없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A-6, 전문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하나? 와닿지 않는 부분은 100%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그게 제주 같은 경우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행정구를 나누거나 해양수도 이런 것과 함께 본원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책에 얼마나 녹여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언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유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제적인 것들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언적인 부분에 그쳐서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A-3, 전문가).

2) 조건은 갖추었으나 이루지 못한 수도

부산은 지리적, 자연적 여건상 해양수도를 칭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로 평가받는다. 지정학적 조건과 함께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 부산시민은 행복할 수 있는 입주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슬로건과 관련해서 보면 아마, 앞에 비교해서 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까 사람과 문화 기술이 융성하는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시민이라는 게 부산시의 주체인 시민을 맨 앞의 키워드로 넣었다는 게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시민과 또 정책, 교수님들이 말해주셨던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에 웰빙이라든지, 행복이라는 부분들을 전면으로, 그런 시민의 행복이라는 부분들을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는 정책 컨셉이 명확했다는 의미로 좁혀지고, 이후에는 동북아 해양도시에 대한 물리적인 기반, 공동체로서 하나의 장소, 물리적인 이런 공동체 지리적인 부분도 명시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들고,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는 아주 좋은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C-2, 교수).

지금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부산이 관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국내 수출 물량의 98% 한국에서 가장 큰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부산이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는 정책이 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이전 정부와 새로운 정부도 바다로 나가서 아시아권, 범유럽권의 국가들과 교류를 해서 내부에서 할 수 없는 경제 드라이브 코스를 외부로 쉼겠다는 게, 그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할 말은 여러 가지 많습디만, 항만 건설이 원년 그 자체로 과거에는 부산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아니면 지금 한 십몇 년을 거슬러가면 항만공사체도로 가면서 부산항만공사(BPA)가 드라이빙 주로 하고, 거기에 부가해서 항만을,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조정된 게 북항 재개발, 항만을 워터프론트 개발하면서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가져가자는 거에서. 그때 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에서 과거에는 무역이 중요하다, 항만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들어갔지만, 구체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도심의 재개발하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한 부분이고, 철도 구간도 있고 선박 계도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부산역사를 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역으로, 과거에 부산항이 어떻게 발전해오고 이런 거부터. 그럼 부산시가 챙겨올 수 있는 것, 시로서 챙겨올 수 있는, 해양수산부나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부산시가 챙겨 올 수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구호나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최근에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아닌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개항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천도 있지만 부산이 제일 앞서갔다는 점에서 또 그런데도 의의를 찾을 순 있지만. 세계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돌파구의 하나로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영화제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항만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계속해서 시가 끌어모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지리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봤을 때 산 강 바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항만 도시가 별로 없는 반면에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건으로 봤을 때 부산은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B-3, 교수).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산의 지리적 요건과 도시 컨셉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이 수도라는 위상을 점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시민이 행복한’하고 ‘동북아 해양’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 ‘동북아 해양 수도’라고 했을 때 저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북아 해양, 아! 해양 항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또 달리 보면 해양이라는 지리적인, 부산에 입지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되겠다, 동북아 해양. 그런데 문제는 수도라는 이 위상을 그만큼 점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는 아마 썩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서울이 수도인데, 물론 세종에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수도로서의 위상을 얼마나 우리가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규모적인 면에서 하느냐 하는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와닿지 않는 시민들도,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동북아 해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리적이든 해양 항만 산업적이든 컨셉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A-1, 교수).

3) 해양과 행복의 불일치

민선7기의 슬로건은 시민 행복의 체감도를 올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시민으로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홍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저는 두 가지인데 시민이 행복한 것, 하나는 해양수도, 지난번 우리 보는 시각에서는 주로 공급자 형식인데 수요자인 시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고객 중심 또는 시민 참여, 시민이 주도하는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피부에 와닿는 체감하는 행복, 과거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체감도가 떨어졌는데,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쪽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와닿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도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양도시 부산은 한국의 해양수도가 아니고 동북아의 해양수도, 상하이도 있고 홍콩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 동북아의 해양수도라는 것은 대단히 크게 들여다본 거죠. 아직은 위상이 그 정도 따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문화수도를 표방하는데 행정수도, 환경수도, 교육수도, 뭐 각종 수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수도가 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것도 있어요. 부산은 예전에 해양특별시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해양수도, 동북아 해양수도.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은 좋고 그것을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관련되는 것들을 해양도시로서 바다가, 천혜의 바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류뿐만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 대한 걸 많이 고려하면 공항이나 항만이나 육상과 바다와 그 다음에 육해공이죠,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면도 같이 내포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C-1, 교수).

또한, 시민의 행복과 해양수도라는 상반된 단어의 사용으로 인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부산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산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단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저는 부산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또는 부산에서 사는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만한, 얘기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한데. 조금 부산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감을 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부산 태생이고 부산에서 대부분 살아왔는데 부산에서 지금 삶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가 부산시민 사회를 볼 때 그렇게 밝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큰 어떤, 큰 규모에 사업을 한다거나 정책을 고치는 것보다 오히려 세심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슬로건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구요, 다른 어떤 색다른 기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들, 지금 모든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얘기되어지고 문화와 함께 모든 것들이 만들어 나가려는 분위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적인 부분이나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방향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A-5, 전문가).

[그림 4] 경제·문화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 17〉 경제·문화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드	빈도	워드	빈도
시민들이	5	부족함	2
정책에	4	비전을	2
구의회	3	소통이	2
시의회	3	시내버스	2
의원	3	시민 체감형	2
있어야	3	실질적인	2
체감할	3	역량을	2
결여되어	2	올려야	2
과감한	2	정책을	2
구체적인	2	지속적으로	2
난폭운전에	2	책자를	2
당장의	2	체감도가	2
보이지	2	틀에서의	2
부분에	2	필요하다	2
부산광역시의회	2	홍보해야	2

2. 부산의 시민 체감형 정책

1)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한 쌍방향 소통방안 모색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감, 유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공동체 구성원이 소통하는 정책 콘텐츠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민모임 조직화, 정책 모니터링 등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가의 역할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이 기본적이다. 쉽게 말해 정책공급자만 알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용어나 내용만 제공될 때야말로 일방향성 소통이라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 간의 연령에 따른 정보유입채널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일방향성 소통이라 볼 수 있다.

정책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들이 알기 쉬운 언어와 내용으로 그들이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쌍방향 소통의 첫발을 내딛는 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구포시장도 있고, 반동도라고 반반 미디어라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나 세대별로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대로 만들거든요, 저희 연구분야에는 커뮤니티와 미디어 이런 데에 보면 그런 관여를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콘텐츠도 만들어지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주체들과 관련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혜택이라기보다는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구체적으로 활동을 지원해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시민들의 모임과 같이 결합해서 만들면(C-2, 교수).

시민참여와 협치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양방향, 쌍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런 소통을 위해 쌍방향을 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도구가 현재로는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E-2, 교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의회까지 갈 것도 없고 부산시 정책으로 봤을 때, ‘교수님 그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부산시에 뭐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수님.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자기들만 아는 용어로 해서 저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실은 저출산, 저출산 이 이야기하는데 실은 맨날 보건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지, 실은 저출산 문제가 보건에 문제가 아니고 실은 경제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저는 연령별로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야 무슨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대의 경우에는 그 채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채널도 다르고 그 소식지 이런 거는 20대는 안봐요. 30대도 잘 안봐요. 40대, 50대, 60대가 선호하는 채널이 그런 채널이고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하는 의견수렴도 어떨 때 보면 그냥 시에서 또는 어느 구에서 전문가 몇 명 불러다 놓고 공청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이 의견수렴을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나, 어떠한 건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C-4, 교수).

2)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실현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요식행위 취급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이나 과정, 프로세스 자체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부산시민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고 연결시킴으로써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행복감·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여러 소규모 활동과 모임을 활성화하고 그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민 체감형 정책을 구상하라고 뜨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먼저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미흡하고 평가 측면에서 시민의 참여를 약간 요식행위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년 전에 부산

시에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나 과정, 프로세스 자체를 공식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C-2, 교수).

당면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인구를 더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인구 280만, 300만으로 잡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적절하게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 경제 부문에 어떻게 관여할 것이고,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 아주 재미 있고 알찬 기획인데. 저는 여러 가지 화두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체감형은 결국은 시민 참여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을 연결시켜주고 그거를 시민들의 자체적인 모임을 활성화,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를, 소규모에 대한 활동에 자발적인 모임을 지원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C-2, 교수).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갈수록 시민 역량이 키워지고 거버넌스도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줌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저는 그 정책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처럼 동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 역할들을 시민들이 갖는 방식인데, 그런 구조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정책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색 맞추듯이 조직을 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듯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하나라도 정책이 시민들의 역할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나씩이라도 해나간다면 그게 점점 시민 역량도 키워지고 거버넌스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회만 하더라도 주민자치 위원회만 바뀌어도 저는 우리나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 위원회는 거의 뭐 기초의원, 구의원 선발하는 그 구조 속에서 그냥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만이라도 더 생동감 있게 정말 실생활에 다른 지역민들과 같이 동화될 수

있게만 잘 풀어내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시민들에게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기존의 참여제를 넘어서는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A-5, 전문가).

다만, 이 과정에서 정작 시민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가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 같은 연구소를 통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가장 강력한 툴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 평가를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모니터링 방법하고 의견을, 시민들이 의견을 올려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가 뭔가면 모니터링이나 의견 상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정확성이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깐 문제가 되는 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앙케이트도 하시고 설문 조사도 하시고 여기 이렇게 FGI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다양하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민들은 별로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현 정부가 통계자료들을 내놓는데 국민들이 하나도 안 믿잖아요. 그건 결국은 그 통계자료라든가 조사방법이라든가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의회라든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감을 되찾는 게 급선무일 거 아니에요(E-2, 교수).

3) 중앙(지방)정부-의회 간 협치 실현

지방정부와 의회는 각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상호 간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주관하는 영역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받는다.

지금 시·구 자치단체에 아젠다 21에 의거 해서 협치를 하고 있잖아요. 협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협치에, 그러니까 위원회잖아요. 위원회니까. 의사결정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의사결정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가야 하니까. 그 장치는 협치로 잘 만들어 뒀어요. 구의원이 들어와서 구별로 해요. 하는데, 문제는 그 비슷한 걸 몇 년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집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 관계 협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이거 하고 연동시켜서 좀 같이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E-3, 교수).

실제 이게 가서 이 사람 바쁘다 이 사람 빼게 하는 노력을 하고, 의회 자체도, 시는 각각의 영역에 있는 주체들이 다 달라서 이게 원래에 해야 하는 목표치를 못 보고, 각자에 어떤 이익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거를 지키느라 너무 급급한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이게 규제혁신도 좋은데 분야별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는데, 뭐 하나 보건하고 복지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서 저희가 요즘에 헬스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헬스시티 만들려면 말은 건강이지만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뭔가가 이뤄져야 되는데 다 각자의 분야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뭔가 의회에 오늘 바랄 점 이런 것들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조율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싶어요(C-4, 교수).

4) 부산에 특화된 정책 구상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부산에 대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정도시와 같은 제도상의 변화, 혁신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연 제도를 구축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시민 체감형 정책을 구상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SK가 용인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 제일 첫 번째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대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식에 균형발전이나 도시의 발전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없고 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대기업이 부산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적정도시, 저는 그게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 내에서의 어떤 제도상의 변화나 혁신체계를 그야말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뭐 혁신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지역에 대한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얼마든지 산학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 하면 결국에 시장님의 정치적인 판단, 중앙정부와의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시적인 상황에서도 부산시에서 자체 내에서 지속가능성 발전이나 시민 체감형으로 만들어가야겠죠(C-2, 교수).

5) 시민 체감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 구축

시민 체감형 정책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했을 때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수혜집단의 의견 반영 시스템이 견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안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대형 사업들부터 해서 몇십억짜리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아, 그래. 시민이 행복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동북아 해양수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구나, 국비를 얼마 따고 예를 들어 5천억짜리라고 하면 국비를 2천억 뭐 예를 들면 시비를 얼마, 구비를 얼마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는데. 그런 흐름을 어떻게 그럼 알게 하느냐 그렇다고 할 때마다 일일이 다 알릴 수도 없을 테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일을 안 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노령화 문제다 하면 노령화 대책 담당 과가 있고 팀이 있고, 사무관, 서기관이 다 담당한다 말이지, 그렇다면 분명 일을 할 거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릴 거냐? 어떻게 아노? 누군가 그쪽에 관여해서 위원회다 뭐다 하면 ‘아, 이런 걸 하는구나’하고 알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잘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아, 안 그래도 문자를 받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그리고 알렸을 때 평가를 제대로 받자, 알리고 잘한다 못한다(A-1, 교수).

저는 이거 시민 체감형이다. 저는 사실 건강정책 말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경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봤을 땐 뭔가 소통 경로를 많이 열어줘서 시민들이 직접 그 정책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쭙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체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어떤 정도들이 있나, 지금 얘기하는 소통위원회 말구요, 어떤 게 있을까요? (C-4, 교수).

정책이라는 게 뭐 시행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모니터링해서 다시 반영하고 정책을 바꾸고, 기획의 기본적인 사업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내년에 총선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수혜자가 됐던,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 시스템이 아주 견고히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게 어떤 정당의 색깔이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될텐데. 항상 이게 이벤트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한 게 특별한 게 다 아시는 내용이고,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그전에 기획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평가받고 이 순환의 고리가 과연 부산시가 하나의 정책을 하면 얼마나 지켜지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출발점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A-3, 전문가).

[그림 5] 복지·환경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 18〉 복지·환경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드	빈도	워드	빈도
시민 체감형	4	부산시	2
정책은	4	부산시가	2
도시를	3	부산을	2
시민이	3	시민들이	2
시스템이	3	실질적인	2
있어야	3	어려움	2
정책을	3	위주로	2
필요함	3	위해서는	2
건설에	2	의견을	2
경제적	2	인프라	2
구의원의	2	자동차	2
대비해	2	정책결정과정에서	2
때문에	2	정책의	2
변화가	2	제도를	2
보좌관	2	지방세	2

3. 시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 필요한 요인

1) 장기적 관점

시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서는 눈앞에 이득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민 체감형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단기지향성과 결과지향성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 체감형이 단기 체감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 정책이나 비즈니스가 구현되는 영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 체감형 정책은(F-3, 전문가).

외국에는 문화재 복원을 할 때 한 30년씩, 50년씩 걸려서 해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 남대문 불타서 난리가 났잖아요. 복원을 임기 안에 해야 하니까 5년 만에 복원하니까 그렇게 부실복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재라는 게 불에 타도 5년 만에 복원이 되는구나. 그럼 문화재 다음에 불나도 5년 만에 또 만들면 되지.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은 어때요? 문화재 복원할 때 30년, 50년씩 걸리니까 아! 문화재는 한번 유실이 되면 복원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시스템적인 게 사회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60, 70년대부터 빨리빨리 세대로 막 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금방은 체감형이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진짜 장기적인 정책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B-1, 교수).

제가 해운대 우송아파트에 살다가 지금은 수영 현대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회사가 좀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교통 인프라가 생겼잖아요. 그 앞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만들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좋아했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도로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 바람에 주변 도로를 약간 넓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택시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이 시민 체감형의 정책을 만들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시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 왜 우리가 정권 전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사실은 들어오고 나서 1·2년 안에 세팅되서 2·3년 뒤에 효

과를 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때 정책이 시민 체감이 되고 ‘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해서 끝나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안 좋아졌다, 그러면 오히려 체감하면서 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길게 잡힌다, 그러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 같습니다(F-3, 전문가).

실패한 이유를 다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모든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조금해요. 내가 담당하는 동안에 그게 분명히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변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과 변형이 계속하다 보니까 원안이 많이 변형된 상태에서 나중에는 동맥경화가 오는 부분이잖아요. 동부산도 그렇고 다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근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나한테 소득일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지금 고3인 우리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엄마 옆에 부산에 있겠어 이러더니, 이제는 무조건 자기는 수도권으로 가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 여긴 일자리가 없어.’ 고3이(F-6, 교수).

2) 대표성 있는 전문가 자문

정책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정책 개발을 했다 해도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결과물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말로 수요조사를 할 때 대표성을 띤 시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얼마나 잘 대표성을 잘 확보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교수님이 그 파트에서 전부 다 전문가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그 파트에 전문성을 띤 대표성, 근데 그게 정말로 저는 제 영역에서 볼 때도 정신건강, 정신보건 쪽에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이게 전문가집단이 분명히 했다고는 하는데 대표성을 띤 사람이 정말로 참여를 했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지, 사실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B-2, 교수).

충분한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만들어진 걸 갖고, 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뭔가 슬로건이 내세워지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B-2, 교수).

3) 끊임없는 홍보를 통한 인지-만족도 제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 측에서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비례하여 체감도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 없는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5030이라든지 도시방재·생활방재·원자력방재·산단방재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방재연구원이 울산에 있어서, 국립방재연구원이. 거기 가서 한번씩 자문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잘 따져서 실행을 해나가야 하고, 그 속에서 시민이 ‘아 안전하구나’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한 거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 측에서 모르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틀을 먼저 잡고 실행도 하지만, 피드백하면서 발로 뛰고 소통하고 공부하고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E-1, 교수).

지금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고령인구가 많은 부산에 접근성을 주는데 산업도 끌어와야 하고 얼마나 숙제가 많아요. 이걸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구나를 체감. 그리고 시민은 내가 알지 못하면, 있는데도 내가 접촉하지 못하면 안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알게 홍보를 해야죠. ‘왜 몰랐어요?’ 하면 안 되죠. 시민이 몰랐다는데. 이렇게 시민이 옛날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춤형인 부분이 교통도 도시계획도 다 가야 하고, 거기에 해상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시든 뭐든 다 해보는 거죠. 그렇게 다 해보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거는 접근금지야 하는 시설도 상당 부분은 시민한테 내어놔야 한다는 거죠(F-6,

교수).

공공재로서의 활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키워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키워드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정말 키워드처럼 되면, 시민이 믿는 거죠. 부산시를 믿는 거죠. 내가 당장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재로서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냥 괜찮다 하고 쓰잖아요. 일반 시민의 ‘괜찮다’ 정도 so-so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준거라는 거죠. 소비자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시민 체감형이고, 그래서 시민 체감형 해서 꼭 보면은 큰 그림만 있잖아요. 이제는 큰 그림은 시민들이 별로 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오는 거죠(F-6, 교수).

4) 현장에서의 시민 수요 파악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 실제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불편해하는지를 파악해야 시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체감형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한테 주셨던 ‘도시측면에서의 시민 체감형 정책추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늘 길 무지하게 막히셨잖아요. 도로교통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겁니까. 황령산 제2황령산터널은 설계된 지 이미 20년 지났는데 아무도 뚫을 생각 안 해요. 동·서 간에 교통이 막혀있고 남·북 간에 교통이 막혀있어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교통은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돈 들여도 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공약으로 안 내세우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걷기 좋은 부산, 걷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그러는데요. 한번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부산이 구릉이 80·90%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런 할 수 없는데, 이거는 그냥 걸어 다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부산의 보도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평지로 안되어있고 경사로 되어있어요. 걸으시면 회한하게 옆으로 잘 걸어갑니다. 이래놓고 걷기 좋은 부산이래요. 그러면은 시민 체감형이란 건 원대하고 거대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평이예요. 당장 애 태어나서 유모차 끌고 바깥에 가보면 유모차 길

로 안가고 땀 테로 가고 보도블록 단차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제가 아까 의원들보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가라는 게, 나가서 직접 시민들이 불편해하는게 뭔지를 알아야 지들이 그 정책을 만들지, 지들이 체감도 안 했는데 체감하는 정책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편안한 차 타고 러시아워에 안 다니니까 부산시에 길 안 막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운전해서 러시아워에 나가보세요. 길 얼마나 막히나.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체감 한다고 하는 정책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지(E-2, 교수).

정부에서 정책 내세우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정부에서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진짜. 그게 일반 시민들 뇌리에 박혀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통 안 되고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방향이 올지. 아까 피드백을 얘기하셨지만 어떤 피드백이 올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E-2, 교수).

5) 최초의 접근성 유지

시민 체감형 정책은 한 번 접근성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점점 사람이 모이게 된다. 시민을 일단 끌어당길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고, 참여했을 때 자기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고전할진 몰라도, 결국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다.

유입력 있는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고,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도 그렇고, 돈을 여기다 뿌려야지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를 딱 해놓으면, 시간이 간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해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 들어오면, 처음에는 고전할진 모르지만, 점점 사람 모이게 되어있다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의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F-6, 교수).

[그림 6] 기획·행정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 19〉 기획·행정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딩	빈도	워딩	빈도
시민의	4	시민 체감형	2
동북아	3	원주민을	2
의견을	3	위주의	2
최하위권	3	의원의	2
그쳐야	2	있다는	2
대상으로	2	있어야	2
도시재생사업	2	자발적인	2
등에서의	2	적극적인	2
때문에	2	정책에	2
반영하는	2	주민들의	2
부산시의회의	2	주민들이	2
사업의	2	지속가능	2
수준의	2	체감형	2
시민들의	2	행복을	2
시민을	2	bpei	1

4.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강화

1) 거버넌스 과정에서 의견 제시 가능한 시스템 구축

시와 달리 시의회는 현실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버넌스 과정에서 사단법인 외에 조합, 협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과감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시 정책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하는 공원녹지시민계획단이나 이런 것처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들이 그래도 비교적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법으로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도시계획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는 사실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없는 거 아닌가요? 제도나 법으로(B-1, 교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책을 펼치고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심도 깊게 논의되고, 그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요. 사단법인이 하지 말고 조합, 협회 좀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어떤 입찰 말씀하셨듯이 조건 있고, 실적 있고,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고 몇 명이 모여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쥘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올라야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어떤 학위가 됐던 뭔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될 경우에는 그 아젠다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만 도는 것이죠, 그걸 수혜하고 있는. 그걸 대상화하고 있는 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청와대에 말씀드린 게 다이렉트로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느냐, 그럼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물었는데 답을 하네? 그런 시스템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A-3, 전문가).

2)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 다양화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확실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연령별, 영역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이런 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들어보면 진짜 저 사람이 이쪽 계통에 사람이 맞나 싶은(B-2, 간호학 전공 교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의회까지 갈 것도 없고 부산시 정책으로 봤을 때, 교수님 그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부산시에 뭐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수님.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자기들만 아는 용어로 해서 저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실은 저출산, 이 이야기하는데 실은 맨날 보건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지, 저출산 문제가 보건에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결정에 의견 수렴이 저는 연령별로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야 무슨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대의 경우에는 그 채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채널도 다르고 그 소식지 이런 거는 20대는 안봐요, 30대도 잘 안 봐요, 40대, 50대, 60대가 선호하는 채널이 그런 채널이구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하는 의견 수렴도 어떨 때 보면 그냥 시에서 또는 어느 구에서 전문가 몇 명 불러다 놓고 공청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이 의견수렴을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맞나, 어떠한 건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적인 의견수렴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C-4, 교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보다 현재 민선7기에서 운영중인 OK1번가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동참하여 설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조례 입안 등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많이 안 하거나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정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못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야기에요. 아까 같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언론에서 각종 위원회 없애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거조차 없으면 부산시에 가서 얘기를 할 기회조차 없는데 위원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좀 더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OK가 뭐냐.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설사 잘못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민들이 다 싫어하면 안 하고, 다음에 원할 때 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더 많이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시에 얘기하고, 의회에 얘기하고, 그걸 수렴해서 아까 같이 정책으로 만든다든지, 조례로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A-4, 교수).

시민의 역할만큼이나 시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의원들이 정책 평가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늘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여쭙봤는데, 일단 택시기사 아저씨는 정책이 잘 수렴됐냐 이 부분을 의회의 역할 중에 그 유형별로, 평가를 얼마만큼 의견을 몇 번을 어디에 가서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반영한 액티비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을 다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요(C-4, 교수).

3) 실질적 쌍방향 소통 지향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의사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소통은 상징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청와대에 뭐 올리면, 몇 명 모이면 답해주지 않습니까. 글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창구. 단일화된 창구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 정책을 꼭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기 보다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것처럼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려면 모니터링, 어떤 주민 의견 과정을 거쳐서 그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원되거나 약간 뭐 친 뭐 그런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반대 반응이 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A-3, 전문가).

예를 들면 600명, 700명의 주민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공무원이 중간에서 잘라먹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되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그런 분들과 계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소통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거에 맞는, 실감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들이 정책까진 아니더라도, 사업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하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육을 먹든,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로 시도한다든지, 안그러면 정치적 논란이 되더라도 청년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혁신적인, 과감한 시도들을 해야 하는데 결국엔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1년 반 동안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슬로건들은 있었죠. 원도심 대개조.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그게 새로운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선도할 만한, 과감한 혁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좀 없어서 달라진 걸 실감 못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A-6, 전문가).

따라서 시민들은 비겁하다고 할 정도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민정책단, 시민참여단, 도시계획단 등의 소통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주도적이 아니고, 뭐라해야 되나 아주 알팍하다 그러냐? 굉장히 비겁해야 돼요. 시민이. 비겁할 정도로 시민들이 예리하게 봐야 해.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게 뭐냐면, 내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선진국 가보세요. 가서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 진짜 철저합니다. ‘내 세금 받아서 이런데 썼어?’ 바로 움부즈맨 들어가 버리죠(F-5, 교수).

4) 정책 PR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홍보와 교육 차원에서는 정책 PR이 필요하지만, 너무 홍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알맹이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을 준비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 정책이라는 부분이 일단 분야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당연히 PR이나 홍보도 필요하겠죠. 기업이 IR 하듯이. 그래서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게 너무 프로파간다로 흘러버리면 그게 위선이 되는 거죠. 특히 행정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3개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10개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특히 교육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너무 홍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알맹이 있는 정책을 펴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F-5, 교수).

홍보만 잘하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모든 정부에서 그것만 하죠. 홍보에만 돈 다 넣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찾는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한테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채들은 모를까? 그런데 자기들도 노력하는 거 아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청년들을 어떻게 정책을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A-4, 교수).

5) 주인의식을 가진 주민들과의 협력적 정책기획

정책과정에서 제도적인 큰 틀은 중장기적 그림을 그려가되,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주도에 의한 협력적 정책기획을 이루어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각 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자치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항상 왜 모든 게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예산이 다 같지만 시가 드라이브 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이걸 했을 때 ‘시장님이 해줬어’가 아닌 ‘우리가 해냈어’가 이게 가장 좋은 리더십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협력적 정책기획을 많이 이야기해요, 기획단계에서 정책 말씀하시는데 결정할 때부터 우리 문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파트너로서, 주체로서 참여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하고 그렇게 아까 다 알 순 없어요. 그 분야는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죠. 자기가 반영, 반영되는 걸 바로 알 수 있고(C-3, 교수).

공무원들이 아까 현장에 매달려 있는데 현장에 내려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 여기도 지금 시민사회, FGI하면서 여러분께 다 물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지향적 기획, 그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큰 틀은, 제도적 틀은 중장기적 그림을 그려가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답도 없고 함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틀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C-3, 교수).

[그림 7] 교육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 20〉 교육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딩	빈도	워딩	빈도
시민의	4	시민 체감형	2
동북아	3	원주민을	2
의견을	3	위주의	2
최하위권	3	의원	2
그쳐야	2	있다	2
대상으로	2	있어야	2
도시재생사업	2	자발적인	2
등에서의	2	적극적인	2
때문에	2	정책에	2
반영하는	2	주민들의	2
부산시의회의	2	주민들이	2
사업의	2	지속가능	2
수준의	2	체감형	2
시민들의	2	행복을	2
시민을	2	bpei	1

5. 시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

1) 자발적 학습 및 의정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초선 의원은 재선 의원에 비해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시에 대해 공부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발적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의원의 자발적 학습을 돕기 위해 시의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대학원을 활용하는 등 시의원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리서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직 다 초기라서 그래요. 제대로 어떤 분들은 삼선, 사선 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에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잘하는 분들 중에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성숙한 문화, 그래서 경험도 쌓고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책 개발이라든지 시정 운영이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거를 많이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습하고 현장에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할 수 있으니까(C-1, 교수).

공부하고요, 공부해서 미진해서 그쪽은 우리 가보자,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C-3, 교수).

본인들이 공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공부하란 얘기는 리서치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시민에 대해 하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거죠(E-2, 교수).

2)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국회의원의 급여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시의회 의원을 급여를 올리거나 급여는 동일시하나 시의원과 구의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시의원의 급여를 올려서라도 역량 있는 인재 영입에 희망을 걸었고, 후자의 경우 시의원의 직업화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본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과거 분야별 전문직 출신들이 봉사의 마음을 갖고 일하던 초기 시의원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저는 대부분 시의회나 정치적인 색깔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꼭 정당에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국회의원들의 지역에 노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히려 아까 교수님께서서는 좀 더 실제로 보수나 채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떤 특별한 전문직, 그 분야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봉사의 마음으로 이 역할을 하고, 대신에 의정을 보좌하는, 예를 들면 그게 뭐 보좌관이 됐든 전문의원이 됐든 그분들의 특정하게, 그분들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실제로 의원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본다는 측면, 그 다양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걸 역량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이 그런 의장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산도 그렇게 어쨌던 간에 부산 지역 안에서는 전문직을 종사해서 2~30년 하시던 분들은 다양하게 이해관계를 서로 알지 않습니까?(A-3, 전문가).

전문가들은 만약 시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좌관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구의원을 없애고 시의원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즉, 보좌관제도는 직업인으로서의 시의원을 야기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의원은 직업화되지 않고, 자기희생을 전제로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하나의 봉사 제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보좌관 제도를 둔다면 조건으로 구의원들 다 없애고, 시의원이 구의원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그런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이제 제로섬 게임이 돼요. 구의원들한테 가는 예산 절약되면서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도 반성해야 할

게 행사에 오는 의원들을 좋아해 주면서 얼굴 팔고 공부하지 않고, 얼굴 파는 의원들을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없어지고(B-5, 교수).

보좌관 제도를 의원님들이 만약 진짜 두려고 하면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자기희생을 발휘해야 해. 저렇게 열심히 뛰고 저렇게 예산을 아껴주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체감형으로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 너무 바쁘다, 보좌관 하나 줘라,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 대부분 시민이 하는 말, 다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B-1, 교수).

시의원도 보좌관을 갖는다는 그런. 지금 패턴 그대로 계속 고착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직업적인 시의원이 나와야 하고. 그럼 보좌관 하나 하면, 하나 갖고 다 모르니까 두 명, 세 명 있어야 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간다 이거죠. 그렇게 갔는데도 시민의 뜻을 다 수렴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의원 같으면 하나의 봉사 과정으로 그렇게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은 직업화 되어가지고 조금은 걱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E-3, 교수).

[그림 8]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 21〉 도시·안전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드	빈도	워드	빈도
때문에	4	시민 체감형	2
시민들이	4	시의회	2
시민이	4	신뢰도	2
정책을	4	실질적으로	2
시민의	3	위해서는	2
정책에	3	정책으로	2
계층에	2	중심의	2
도시안전	2	중요도와	2
도시안전분야는	2	지역의	2
동북아	2	집행이	2
목표를	2	체감하기	2
벗어나	2	체감형	2
사고가	2	컨텐츠가	2
사고에	2	피드백을	2
시민들의	2	필요한	2

6. 부산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1) 의회 구성 간의 협업구조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시의회 의원들은 깨어있는 눈으로 정책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역량을 함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은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로 그 부분을 시의회가 채겨야 하는 것이다.

요즘 깨눈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시의원분들이 깨어있는 눈으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정책역량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예로,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에 6년간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이동한 이유는 대안학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특정 집단들이 들어오면은 일반화가 아닌 어떤 이기주의적·황제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가 들어오면서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한 명씩 산으로 불러서 ‘너 머리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들은 대안학교답게 덮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 10가구 이상이 동시에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보조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의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깨어있는 눈으로 볼 때만 보인다는 거죠(D-1, 교수).

즉,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회 구성원 간의 칸막이를 없애 협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정책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법이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안에서 운신할 수 있는 게 참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중앙정부가 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채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임시의회라고 했을 때도 시의회도 이제 정책역량을, 이슈에 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역량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평가해서 지속해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말이, 의회 구성 안에도 칸막이가 되어있어서 서로 간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 일이 각자

하다가 안 되고, 의견이 갈려서 꼭 필요한 걸 놓치고 이런 일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회가 생겨서, 앞으로 정책역량을 기르고 서로 간에 부서 간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걸 의회에서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D-6, 교수).

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당장 이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선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의원의 자리는 역량을 키워주는 자리가 아닌 이미 준비된 사람이 와야 하는 자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심지어 전문가 일부는 시·구의회 의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올려서라도 능력 있는 이들이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입법 조례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시의회, 구의회에는 서울대 출신이 없냐고. 당연히 안 들어오지. 여기보다 다른 데 서울대 출신이 가면 월급 훨씬 많이 받는데, 왜 들어오냐고(A-2, 교수).

저는 시의원이 그거까지 개입하면서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법 조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최선인 거 같던데(A-4, 교수).

2)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확대

대부분의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정책 평가 및 견제·감시 역할인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신진 세력으로 들어간 의원부터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대충은 알지만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게 부산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희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뭘 바뀌었는지 아니면 뭘 제대로 옆에서 서포트를 했는지 감시·관리 기능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죠

(F-5, 교수).

신진 세력이 들어간 그분들의 역할들이 어떤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누군가 캐치해주는 그런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B-1, 교수).

따라서 시의원의 우수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들의 성과를 한눈에 보게끔 편집하여 행정복지센터 등에 발간물 형식으로 배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의원에 대해서는 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누군가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가 뭔지 파고들지 않은 이상은 우리들이 의회의 그 내용을 보기가 참 힘들겠구나’ 찾아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그 역량이 가장 필요할까. 아까 교수님께서서는 의원 개인역량이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좀 더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일 년에 분기별로 자기의 성과물을 시민의 눈으로. 막 거기다 데이터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좀 넣고, 우리 생활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마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들에 비치해서 좀 쉽게 발간물 형식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D-5, 교수).

자기 돈으로 해야 하니까 구조적으로 아까 같이 또 다른 나라 하는 거 보면 또 할 말도 없지만, 구조적으로 시의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랑 만나가지고 뭐라도 하려면 물이라도 한 잔씩 드려야 할 텐데 구조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의회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좋은 의원상 주고 있던데 그걸 가지고 좋은 조례를 갖다가 몇 개 건어서 시민들한테 투표해서 올해의 조례상이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관심 있게. 요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한 번씩 보면 지난 의원들을 보면 자기 상 받았다, 이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뭐 얘기하는지, 지방자치 의원 대상을 받았는지 별로 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받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A-4, 교수).

3) 시의회와 시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시의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시민들은 서로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함에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깎았습니다. 라는 거죠. 걸러주고, 객관성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의회의 기능이죠(F-5, 교수).

시의회는 그렇게 심사하고, 평가하는 내용도 있지만, 입법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시의회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어떤 간담회나 집담회나 이런 것들, 또는 연구조사들을 많이 해서 계속, 또는 시 정책들을 분석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봐서 부산에 이런 조례들이 있다면 부산이 여러 가지 부문에서 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주변에 여론화가 안 된 생각만 가지고 주장만 펼치시고 비판만 하시는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A-5, 전문가).

4) 의정활동에서의 당파주의 지양

현재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저평가된 이유는 다른 요인보다는 단지 특정 정당에서 의회 다수석을 장악하고 있기에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당 간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의 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독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이 정당에 휘둘리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 당에서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좀 낮게 나온 거 같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행정 조직이 있으면 의회라든지 그거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들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 재정감사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그 기지에는 그냥 한 당에서 장악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한국당 쪽이 장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쪽에서도 장악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기지에 좀 있지 않겠습니까?(F-5, 교수)

그래가지고 특히 저는 정치까지 들어갔으면 구의원을 한다고 하면 정당공천제를 없애든지, 그 구의회 일 하는데 뭐 정당들이 관여해가지고 이념싸움이나 하고, 이번에 남구 보니까 의장 뽑는 거 가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더라니깐요, 동수가 되니깐요(A-4, 교수).

[그림 9] 해양·교통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표 22〉 해양·교통 분야 전문가 FGI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딩	빈도	워딩	빈도
시민 체감형	4	15년	1
글로벌	2	pr과	1
부산시	2	pr이	1
시민의	2	가져야	1
위해서는	2	가지고	1
유치할	2	가지려고	1
이유는	2	감수해서라도	1
정책에	2	개편에	1
정책을	2	것인지	1
정책의	2	견제와	1
정책이	2	결과지향성	1
중요한	2	경쟁력	1
체감하는	2	경제구역	1
카지노	2	계층별	1
해양수도	2	공공성이	1

7.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자치 참여 방안

1) 시민에게 주도권 이양 및 공감대 형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보조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디어, 정치협력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연계되어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행정에 취약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보조 역할이 되어야 한다. 즉, 사업의 주도권을 관이 아닌 시민에게 이양하고, 마을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야 말로 시민 체감형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저도 하나, 같이 활동했던 경험, 어쨌든 공무원이 있어야 해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무원을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적정도시나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예를 들면 이제 또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섞여 있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정치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가라든지 마을공동체인력양성사업 이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면서 활동도 보존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C-2, 교수).

그 마을에 각 단체가 저녁 모임을 할 때마다 가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이 문제가 하나가 연결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니 이 마을에 뭔가 발전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포절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보자. 그런데 저는 주체라기 보다는 도와드릴 수 있다, 선생님들이 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득을 얻는 거고 저는 그 프로포절을 만들고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와요, 교수님 이거 이거 할건데 이번에 몇 시에 모입니다, 이거 할 거 그때 말씀하셨던 거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개입한다고 해야 하나요? 개입하는 시점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가 그 마을에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제 반응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더라고요(C-4, 교수).

2) 민주시민 교육 강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부산에 남아 있어야 하고, 부산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중장년층이 아닌 청년층, 그리고 청소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참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같은데는 CAP라고 해서 시민사회하고 굉장히 연대를 하는데 그거를 육성을 해주요. 지금 우리는 대안세력을 많이 해서 건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시민사회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도 하고, 파리시민사회 교차로 하는, 시민 참여 연대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에 대한 경영기술 교육을 시 차원에서 해요. 그래서 3,000명 이상 인턴십을 하고, 시민 사회단체 경영 자격증도 주고, 각종 공공서비스 무료제공해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상담도 하고, 시민 교육도 하고 이걸 갖다가 필요한 자원도 제공해 주고, 상담팀도 운영하고, 시가 보유한 시민사회 관련 문서 자료 제공,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많은 과목을 이수합니다. 한 237개 과목 중에 258개를 강좌 해서 교육 이수하면 거기에 보고서도 내고 면접도 해서 자격증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하고 연대하면서 육성을 해주거든요. 아무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하니까(C-4, 교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실은 이 자치가 우리가 하면 좋죠. 자치가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잣대로 주민자치형 뭐 또 몰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은 또 소외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제일 시간들이 많고 뭔가 선생님도 연구를 하면서 이걸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시민 모니터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단 중에도 지금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실은 한 번만이라도 시민 모니터단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알고 이걸 한번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뒤로부터 관심들을 두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어떤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부산에 남아 있어야 하고 또 부산을 발전시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40, 50대 중장년층만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시민 모니터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C-4, 교수).

3) 부산시의 주체적인 정책 추진 및 집행 필요

자치분권의 강화로 부산시 예산이 증대했지만, 농촌과 도시 간 소비의 차이로 예산 상 갈등이 야기되어 성과를 홍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확보한 예산은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찾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에의 방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2천억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됐다고 하면 2천억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정책 대안 방향성을 물어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자치분권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해서 집행부가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많이 찾아서 모니터링하면서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하지만 대안을 모색하는, 네 지역 정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역자치로 바꾸고(C-1, 교수).

1. 균형발전 · 도시재생

1) 적정개발 또는 개발억제를 통한 부산의 강점 활용

부산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도시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도시 내 인구가 너무 분산된다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단점이 생긴다. 무작정 서울을 따라하는 과밀개발을 진행하면 집값만 상승될 뿐이다. 따라서 적정개발 내지 개발억제를 통해 부산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부산에서 서울에 일자리를 가서, 서울에서 급여를, 초봉을 2천만 원 정도 받아서 멀리 다니기 싫다고 하면 고시텔에 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 쪽은 고시텔에 갈 정도면 서울에 기본적으로 인서울 내에서 예를 들면 원룸 하나 얻으면 7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외곽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돼서 또 부산으로 다시. 저는 조금 부산이 누리는 혜택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서울을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과밀개발을 해서 집값을 계속 상승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적정개발 내지는 개발을 억제해서 부산이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예를 들면 대안적,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넓어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요즘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스코틀랜드 이런 데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시 포틀랜드로 다시 넘어가고 그러지만, 서부에 넘어왔던 사람들은 뉴욕에 살면 다들 너무 지쳐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부산은 뭐 일단 바다랑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잘 잡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그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개발 정책들도 강력한 개발 중심, 과밀개발, 서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당히 제어하는 것들도 필요하고(A-6, 전문가).

2)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진행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는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차별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기획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뫼를 하더라도 감천문화마을이 잘되니까 감천문화마을 투 쓰리, 현여울마을도 똑같이 무슨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벽화. 이렇게 해버리면 또 있잖아요. 감천문화마을 투, 쓰리만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에 만디버스 이런 거 할 때도 버스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콘텐츠가 좀 달라야지, 만디버스가 잘 되는데 전부 다 만디버스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심도 있게 보고, 그 어떤 삼복도로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차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저거 저게 잘되면 감천마을 2를 만들어서 둘 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기획자들을 잘 양성해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도시재생을 해줬으면 좋겠고(A-4, 교수).

또한, 도시재생은 노인의 지혜를 활용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인의 삶에는 지혜가 묻어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콜라보레이션 오퍼레이팅(collaboration corporating)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작은 정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를 하던 재생사업을 하던 물론 나이 많은 분들도 실제로 제가 갈 때마다 마을 만들기 할 때 리치픽처 그리기 하고 함께 만들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요, 노인이 죽으면 박물관의 소멸? 도서관의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에서 무궁무진한 낙동강 쪽에서 민간공동조사해보면 지혜가 과학이, 지혜가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야 할 개체가 아니라 함께 파트너로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아까 의견 반영할 때 발언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오퍼레이팅(collaboration corporating)이 되는 게.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하고 그것이 출발점, 작은 부분들. 그런 게 이제(C-3, 교수).

2. 교통

1)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도로보수 필요

교통은 사회 인프라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부산은 도로부문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더 자주 도로를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뒤편 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안전 보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도시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도시 일자리 경제도 창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민선 3·4·5기에도 안전을 저는 주장했었는데 그때하고 다르게 국민 수준이 또 소득수준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만 하더라도 토목에서 도로포장 종류가 많습니다. 콘크리트·아스팔트 등 있는데 투수포장이 있습니다, 투수포장. 일본이나 다른 데 가면 달려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투수포장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도시안전의,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인프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셉테드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뭐 소득수준이 3만 불, 3만5천 불 올라가는 시대에서 도시안전이 더더욱 중요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E-1, 교수).

거기다가 부산은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도로 파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4배 심하고 파이는 것 자체도 엉망으로 파여요. 비 한번 오고 나면 보통 엉망진창이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누더기가 되어있는데 긁어내고 다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뽕뽕만 해요, 계속 (E-2, 교수).

2)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해상교통 활성화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해상교통은 교통, 환경, 조선 등 여러 산업과 연계되어 해상교통을 살림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때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

이 시, 그리고 시의회의 역할이다.

제 생각에는 이쪽에 해상교통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물론 서울 한강에 수상택시가 있고 하는 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또 다른걸 한 번 찾아봤습니다. 볼리비아에 케 이블카를 가지고 하는 그건 우리나라하곤 안 맞을거 같아요. 산악 지대애나 되고 우린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해양교통을 살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가 살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살 수 있냐면은, 저는 조선형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이쪽이 전부 다 교통 마비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수상택시라든지 수상버스라든지, 조그마한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배를 만듭니다. 배 이런 걸 몰고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 안전만 고려한 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환경문제하고 전기, 요새 말하는 수소를 넣어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고려하고. 그런 수상택시를 이쪽으로 운항하고 그러면 교통도 살 수 있고 경제도 살 수 있는데(F-4, 교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해양교통수단이 어떤 게 들어오든. 예를 들어봅시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외지인이 왔을 때, 해운대·기장 스팟에서 태종대를 갈 때 얼마나 내부교통을 이용하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해양관광도 즐기면서 경관도 즐기면서. 그러려면 여기 이용객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F-5, 교수).

근데 어차피 부산역에서 다 내려주니까. 솔직히 계속 꾸준히 신경만 쓰면 되거든요. 어쨌든 데크로 내려올거잖아요. 그렇게 데크로 내려온거를, 저는 외부에서 손님들 와서 역으로 픽업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게 바다 보고 ‘우와’하는 거예요. 부산역 자체에 바다 쪽은 쪽 오픈을 해놔서 볼 수 있고, 쪽 내려갈 수 있고 데크로 내려가면, 사람이 모이죠. 부산에만 오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왔더니 수상버스도 있고 수상택시도 있다는거죠. 그리고 포항처럼 도선형으로 해서 내가 내려서 볼만큼 보고 티켓으로 다시 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물어봤을 때 뭐가 궁금하냐 하면, 뭐 용봉사 뭐 태종대 이 주변 이런 것도 다 보지만, 이런 부두시설들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북항의 일부분에 크레인도 있고 부두시설이 있는거요, 그 일부분을 일반시민하고 관광객한테 공개되는 루트로(F-6, 교수).

3)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의 교통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당위성을 확보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 또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홍보해야 한다.

저는 5030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가자, 방향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자고 하면 어쨌든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되면. 가장 비등한 예로 옛날에 제가 은행 처음 들어갔을 때는 통장 막 창구에 던졌어요. 사람이 많아서 던지고 받고, 주고 받고. 그런데 요즘에는 땡땡해서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게 번호표로 다 통하잖아요. 심지어 음식점까지도 번호표로 통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교체됐느냐, 보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당위성을 가져야 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물론 불편한 부분은 있죠,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하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다 불편할 것이다(A-1, 교수).

3. 재난 · 안전

1) 재난 · 재해 방송 시 구체적인 대피절차 안내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한 주의·경고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등 재난대비절차에 대해 알려야 한다. 명확한 대책이 없는 안내방송이 나갈 경우, 시민들은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해 대피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 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태풍 이번에 왔을 때 저기 마린시티하고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게 되면 재난 방송이 나옵니다. 저지대주민은 피하고 차가 침수 안 되도록 주의하라고. 그거는 제일 비겁한, 장군이 부하들보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살아서 돌아오도록 해줘야지. 그런데 ‘너 살아서 돌아오는 건 난 모르겠고, 난 살아 돌아왔으니 끝이다’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 마린시티 그때 지하에 침수 되는 게 예상이 되면, 그 위에 있는 학교부

지 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지금 차량을 어디 고등학교로 빨리 대피시키시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대책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심하라. 그건 대책이 아니고 그냥 면피거든.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그런 걸 들으면 시민들은 그냥 ‘통상적인 멘트구나.’ 그래서 피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E-4, 교수).

2) 자연령층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자연령층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갓은 행동강령들이 배포되더라도, 뒤늦게 배우는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따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시안전에서 덧붙여서 거기에 초점을 두면, 저는 과거의 교육학자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수세식 변기가 나오면서 이걸 서울대학교에 실었대요. 그런데 신문지 뭐 풀어서 넣고 이러다 보니 다 막혀서, 이게 교육적 아이러니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수세식 변기를 제일 똑똑한 애들이 있는 서울대학교에 넣는 게 아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넣으면 수세식 변기가 막힐 일이 없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늦게 배웠지만 도시안전이나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안전·사회안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동강령이 나오고 하더라도 따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통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교통안전시설에 가서 훈련받고 이러는데 개들은 실수를 안 해요. 애들은 한번 딱 배우고 나면. 그러면은 도시안전에 관계되는 것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녹을 수 있게끔. 강의로 들어가는 게,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최근에 대학 같은 경우는 비교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에도 유사한 게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도시안전 관계되는 것들이 녹아들어 갔으면, 장기적으로 가면 안전한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E-3, 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이 폭발되면 후자가 되는 거거든요. 선제적 대응은 뭐 안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폐로 하는 방법밖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면 행동요령이든 뭐 민방위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걸 해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죽을거야,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몸에 안 받아있는거죠.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들이나 계속 교육이 되어있다면 애네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10년·20년 이후에 안전한 도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E-3, 교수).

3) 안전에 대한 문제인식 필요

도시안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민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시민이 위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안전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부산시 물이 엉망이잖아요. 식수로 먹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바로 먹잖아요. 수도물을 받아서 바로.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은 안전하다 원래.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면 시민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이 더럽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도 없죠. 그러나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훈련이 되지 않고 그걸 무시하는, 안전에 대해서 방관한다든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면 안 통 한다는 거예요. 시민이 성과평가를 한다는데 모른다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민중심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그 위기를 느껴야 자기도 알겠죠.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 위기가 나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왔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걸로 인해서 수명이 얼마나 줄는지, 그게 공포라 할 수 있지만 알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미세먼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면 그건 한계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일은 없죠. 쉬운 일은 없지만 이런 이슈가 생긴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우선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E-3, 교수).

4) 고위험군 사고에 대한 대비 강화

부산은 최근 잦은 지진으로 인해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원전 사고와 관련해 위험하다고 걱정이 드는 부문이 있다면 상시 가용 조직을 만들어 부산 전 지역에 대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저희 부산은 원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포항을 보면 근래에 지진을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포항은 가보면 의회 바로 밑에 지진대책반이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공무원에 대한 불신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포항시에 있는 지진대책반 공무원들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공무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시민들에게 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포항 사람들에게 대해 지진에 대한 대피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가서 그 시민들과 같이 권역별로 따로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피 훈련 시키고, 이런 것들을 상시체제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우리 ‘민방위 본부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나오는 그런 민방위 훈련 때만 잠시 해쳐 모여했다가 흩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험을 느낀다면, 그리고 안전도시를 표방하신다면, 부산에 원전대책반을 하나 만들어서 상시가동체제로 부산의 전 지역에 대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해요. 부산시에서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포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E-2, 교수).

4. 문화 · 관광

1) 삶의 질과 연결되는 정신적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산업적 산출물로서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삶의 질과 연결되는 정신적 인프라로 바라보는 사고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을 투자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유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어쨌든 시민의 행복, 그 다음에 개발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이게 문화 예술 분야를 직접적으로 어떤 돈을 버는 산업적 산출물보다는 이게 삶의 질과 연결되어서 내지는 기초적인 어떤 정신적인 인프라로 봐서 행정분야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도 이게 안 바뀌죠 (A-6, 전문가).

왜냐하면 영화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문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저희가 요청받는 것들이, 상업적인 성과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저희가, 저희 조직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영화를 예를 들면 부산의 어떤 장르를 보면 독립영화라든지 상업영화로 성공하지 못하는 영화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시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어떤 동향들을 보면 과연 몇 개의 기업이 부산에 있고, 어떤 경제적인 수치로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이 영화제의 도시고, 그 다음에 부산이 아시다시피 창의영화도시로도 인정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세월 동안 모여있고,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부산 시민으로서 영화제 자원봉사자 역할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게 경제적인 수치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있겠지만, 그러한 기초가 기본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기초에서 절대로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라는 부분이 최근에는 조커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에서 하나의 특정한 배역을 가지고 다시 조커라는 영화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만큼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얘기를 풀어내고, 다시 교육을 받고,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를 들면은 어떤 경제적인 산출이 됐든, 뭐가 됐던 그런 부분이 연계되서는 좀 위험한 상황에 저는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지금 부산시가 바라보는 문화,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튀어 나가야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A-3, 전문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저는 어떤 형태든지 유형화시켜야 한다. 제가 은행에서 홍보를 담당할 때 맨날 듣는 소리가 ‘너는 맨날 돈만 쓰고 뭐하노?’ 맨날 그 소리 들었어요.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데. 그래서 열 받아서 1년 동안 신문에 난 기사 전부다 가로 새로 자로 다 썰어요. 그리고 이제 5단 통광고 내면 이게 한 천만원 하면 신문 자로 다 썰어서 보니까 16억을 벌었더라고요. 16억을. 그래서 제가 ‘16억 벌었습니다. 일년에 1억도 안 쓰고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그런 대응 가능한, 만들어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유형화시킬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A-1, 교수).

5. 경제

1) 해양수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및 현황 파악

해양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 발전전략을 세울 때는 현재 부산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에 오거돈 시장님 오셔가지고 트라이포트 전략을 하시려고 하는데, 트라이포트가 되려면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각각의 트라이포트를 구현하는 세 가지 포트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거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 목표 안에 들어간 게 한국공항공사를 부산으로 가져오자 하는 그 2차 혁신도시 인근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들어갔던 것이.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가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있었던 혁신도시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전략을 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그 밑에 보면 동북아

거점도시 부산인데요. 이게 해양수도를 세우기 위한 도시전략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동북아 거점도시라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물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F-3, 전문가).

그런데 저희들 도시개발발전전략을 세우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은 해양수도를 왜 그렇게 붙이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자, 우리가 해양관광산업을 제대로 해왔습니까. 항만의 물동량은 제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조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허브항을 추구하면서 고베항·싱가폴항 자유무역항 그다음에 상하이항, 물동량이 점점 우리가 처지드만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인천에 우리가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 항만물류 쪽에서도 힘을 못 받아. 우리가 해양관광산업이라고 제대로 마이스산업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305km의 아주 멋진 천혜의 해안 코스트 라인을 가지고 있고 항만도 한국 제일의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곳에서 과연 이 두 개의 축을 살리고 있냐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신공항도 마찬가지거든요(F-5, 교수).

저도 좀 덧붙여서, 어쨌든 저희가 해양교통 쪽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관광·해양·물류 같이 초점을 맞춰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과거에 있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요즘 게이트웨이를 든다고 하는 부분에 이런 복합적인 센터의 기능을 부산이 해서 글로벌한 물량을 잡고 그거 관련된 부대 산업을 해서 유입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유입하고 젊은 층들을 잡아놔야,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불리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걸어가야지 서 있으면 손해이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아까 인천을 말씀해주셨는데 오래전부터 부산항이 물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중심이 됐어야 되는데 물류 중심을 하니까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F-6, 교수).

2) 선택과 집중

해양이라는 분야는 해양관광, 해양물류, 해양조선, 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맞물려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또한, 부산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도시와도 협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뭐 해양 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산시 전체의 산업 그다음에 정책. 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산업이 되고 산업끼리 연결이 되고 하는건데,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잖아요.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부. 사실 부산도 전문가들 다 해갖고 같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과실이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대부분 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림을 그리지 말고, 정말 집중합시다. 하나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중에, 여기 이제 좀 변형은 되어있습시다만, 지금 뉴딜사업이 워낙에 지금 강하게 걸려있어가지고, 정부의 국정 기초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 16개 구·군이 전부 재생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돈이 내려오니깐 사람들이 전부 입만 짹 돌리고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 그래서 해양이 제일 중요하단다고. ...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전체 도시에서 몇 위쯤인지 대충 아십니까? 우리 부산 도시 하나만 갖고는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부울경 합하면은 아마 그래도 한 100위안으로는 들어옵니다. 부울경이. 서울은 그래도 10위권 안팎으로 왔다갔다 하고. 정말 우리 부산이 시세가 도시경쟁력이 너무 약화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그나마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게 해양물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단순히 해양물류가 아닌 관광 산업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갔으면, 복합적으로. 이제는 뭐 주거 기능 하나만 가지곤 안되지 않습니까. 주거·산업·업무·레저·복합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대로 도시가 성장을 하는데(F-5, 교수).

6. 사회복지

1)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필요

지금 통계로 봤을 때,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가 40%에 육박하게 된다.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20대가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30~40년 뒤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 통계로 본다면 2050년 되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인구가 40%예요. 그러면 20대면 지금의 절반, 10%도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30~40년 뒤에는 재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처리하려고 좀 하다 보니깐, 누군가는 국가에 장래도 생각하면서 큰 것도 하면서 작은 것도 같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시기라는 거죠(A-4, 교수).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안심하고 육아를 맡김으로써 사회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시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되게 교수님 말처럼 되게 그룹을 나누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취약계층도 물론 널려있는데, 최근엔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생산인구도 줄지만, 실제로 보면 젊은 학생들 만나서, 저는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여학생들도 많이 만나서 보면 정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육아의 문제, 되게 심각한 것 같거든요. 보면 아무리 지금 예전에 비해서 참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정말 안심하게 결혼을 해서 육아를 담당해주고 내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고령화를 막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위에 보면 육아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직장인들 많이 보고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시행해서 성공했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출산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문제일 수 있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더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면서 교수님 말씀 따나 좋은 직장을 구해서 다 위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 좀 더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B-2, 교수).

문제는 현재 ‘노인이 아닌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기준이 올라간 것이다. 노인과 중장년 사이에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두고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교수님이 안을 내셨지만, 실제 노인 인구는 많은데 노인이 아닌 노인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60세가 넘었어요. 옛날 같으면 노인인데, 지금 노인도 아니고 65세에 퇴직을 해. 교수들이 65세에 퇴직을 하면 근데 그때도 노인이 아니야, 근데 일할 힘은 있는데 노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노인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노인정에 가도 70도 이제 노인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80에 죽는데 10년 더 노인으로 있어 보고 죽는 게 아니라 노인 같은 대접도 못 받고, 80대에 노인정에 가려니까 그때는 받아주는 것보다, 친구를 사귄 기회도 없어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자꾸 소외되어있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위한 돌보미들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연금 받는 사회는 전부 선진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사회복지 정책이 잘된 곳을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그 노인들이 늙어갈 때 치매가 걸리거나 치매에 걸렸을 때 케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육 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관심을 줘야 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B-4, 교수).

7. 행정서비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부문 개방

부산시민은 민선7기가 결국 정권의 변화만 있을 뿐,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기성세대의 의견만 담겨있을 뿐, 현재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 참여 부문을 아주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경제문화라는 분야에서 크게 전체적인 아젠다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들을 짜는데 있어

서 그렇게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매력적인 내용이 없다는 게 기본 전제구요, 그 이유는 다시 돌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사회 중심의, 또 어떤 정치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지식인 측면이라든지, 기존의 기성세대 목소리에 너무 많은 게 담겨있다. 이미 지금의 20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고 그 친구들이 해석하는 정보의 양, 정보를 얻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정책이나 아젠다를 만드는 과정들을 기존에 방식대로 만드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민선7기에 문화정책 같은 경우에도 따로 칼럼이 있습니다만 되게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구성, 참여되는 것들도 부분들도 아주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대든, 그게 뭐 나이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그게 정말 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보면 민선7기라고 하는게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이라고 해야 하나 바꿨지만 실제로 당의 색깔말고는 실제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당에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일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되짚어 보거나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일괄적인 부분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간다면 대부분 그걸 다시 분열시키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누구나 이해할만한 것들 없이 정책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A-3, 전문가).

2)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필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려면 시민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책에 대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는 사실 건강정책 말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경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봤을 때 뭔가 소통 경로를 많이 열어줘서 시민들이 직접 그 정책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체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어떤 정도들이 있나, 지금 얘기하는 소통위원회말구요, 어떤 게 있을까요?(C-4, 교수).

저는 노력을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체감이라는 부분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매체들은 단방향이거든요, 메시지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찬성과 반대, 너는 여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참여를 했느냐고 물어볼 때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말이죠(C-4, 교수).

미시적 측면에서 정책에 대해 접근했을 때 정책의 사각지대, 즉 현장에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시적 측면에 더 깊게 들어가서 본다면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큰 틀 속에서 맞는 맞지, 우리 제일 어려운 게 경제잖아요, 심각한 경제상태인데 과연 경제적 중앙정부에 소득주도성장이라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지금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말입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자, 청년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청소년 아동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측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체감할 정도로 과연 그것을 의견도 수렴하고 가서 점검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는 모니터링해서 반영을 하는 이런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시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시정은 공약하고는 잘 만들어놨는데 실현이 안 된다면 시의회는 경제 균형의 역할로 비판적, 야망적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주당 시장이고 민주당 주도의 다수석 아닙니까 의회라고 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소통하면서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C-1, 교수).

3) 현장에 알맞은 조례 제정예의 노력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현장에 알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시의회에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수록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일부 조례가 사문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조례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사문화된 조례들을 너무 많이 봤고, 조례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그 조례를 근거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정치와 관련된 표 때문에 시와 구가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또 그걸을 조율하기 위해서, 실은 조례 있어도 그게 해결도 안 되고 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도, 알고 있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아까 소동위원회 규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해줄 수 있는 뭔가의 기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윤활제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너무 그것 때문에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있거든요(C-4, 교수).

옛날에 법령이 한 1500개 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에 마련한, 수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결국은 헌법의 규정 때문에 조례를 자유롭게 제정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유명무실한 제대로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좋은 조례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의회가, 제가 그래서 부산시의회가 잘못 만들어놓은 조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의견수렴을 잘해서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부끄러워서, 시의원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아라고 만들면 제대로 잘 만들어라 그런 것들이 소통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의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좋은 조례 만들면 한국지방자치학회(단체) 이런 쪽에서 좋은 조례 만들면 상도 주고 계속 시민하고 좋은 소리 많이 나와요, 제일 처음 만든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국회의원들보다 5년 먼저 만들어서 알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보행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한 조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살기 좋은 우리 지역, 또는 지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일부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잘 작동되도록 시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죠(C-1, 교수).

4) 주인의식을 지닌 부산시민과의 협력적 정책기획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예산을 운영할 경우 정책은 부산시민이 일방적으로 수혜만 입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부산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기획’을 시작해야 한다.

자치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항상 왜 모든 게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예산이 다 같지만 시가 드라이브 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이걸 했을 때 ‘시장님이 해줬어’가 아닌 ‘우리가 해냈어’가 이게 가장 좋은 리더십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협력적 정책기획을 많이 이야기해요, 기획단계에서 정책 말씀하시는데 결정할 때부터 우리 문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파트너로서, 주체로서 참여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을 하고 그렇게 아까 다 알 순 없어요. 그 분야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반영, 반영되는 걸 바로 알 수 있고(C-3, 교수).

지역주민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참여해도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활동가들이 퍼실리테이터로 많이 참여하는데요, 그 부분은 초창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참여해서 효능감을 얻은 다음부터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C-3, 교수).

8. 일자리

1) 시민에 대한 일자리 정책 홍보 강화

도시 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원래 존재하는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에게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활발하게 홍보해야 한다.

미국에 제인스빌이라고 미국 위스콘신주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GM 공장이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지역경제에서 한 여러 가지 대응책 중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도시나 인근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부, 지원수단들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일자리 훈련을 받으려면 어디를 가라,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 심지어 자살방지기관까지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기관 소개 다하고, 어디 전화 번호 다 넣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뿌렸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얻은 생각이 뭔가 하면 일자리나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쓰거든요. 늘 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대학생들도, 시나 정부에서 뭘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있는 데도 안 가거든요. 안 가면서 ‘뭘해주는지 몰라요’라고 얘기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게임을 해도 그건 안 쳐다봐. 저는 그래서 시민들이나 청년들한테 우리가 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뭘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면 제인스빌처럼 책을 만들어서 그냥 수만부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뿌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디 걸려서 읽어 보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네 하고(A-2, 교수).

2) 정책에 대한 수요자적 접근 필요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할 때에는 공급자의 관점보다 수요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냥 정책이 잘 만들어진 걸로 여겨 홍보에만 집중할 경우, 실제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일자리나 만들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이 저희들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취업 어디에서 들어오면 재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학생들 욕하

면서도 ‘재 아무 생각 없을거야.’ 하면서도 둘이 얘기해보면 자기들도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공급자 기준에서 접근하니까 자꾸 미스매칭이 생기는구나.’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만 잘하면 다 알 것이다, 생각 해버리면 모든 정부에서 그것만 하죠. 홍보에만 돈 다 넣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찾는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한테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재들은 모를까? 그런데 자기들도 노력하는 거 아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청년들을 어떻게 정책을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기들 어렵다는 것은 독박육아 때문에 애 안 낳을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는 자꾸 있잖아요. 돈만 주면 애기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독박육아 때문에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육아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안 낳는건데 우리는 자꾸 돈줄게 돈줄게 해서 돈 내는 정책만 펴고, 재들은 독박육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해주니까 자꾸 애기를 안 낳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A-4, 교수).

9. 교육

1) 학생들의 쾌적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하는 예산 외에 시·구청 또한 학생들의 쾌적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강남 8학군이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완전히 예산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8학군은 강남구에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우리 구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예산도 있지만, 구청에서 학교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준 게 뭐냐면 컴퓨터 없을 때 컴퓨터실을 학교에 만들어주고, 교육여건을 또 학생들 여름에 덥고 하니까 그런 예산으로 에어컨. 저 부산에 어느 학교 학교운영 위원장 하면서 에어컨을 겨우겨우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서 해드렸는데, 그다음 해가 되니까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전기 쓸 게 없어서. 이게 부산의

현실이고요. 강남 쪽에 가면 애들 공부하라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런 것들을 부모도 서포트 해주지만, 서울특별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학교로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있는 학교도 우리 구역이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인식의 정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부산에도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원했다는걸 구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준다고. 예산 중에 얼마가 학교에 무슨 명목으로 갔다. 모든 주민들이 우리도 직장에 가서 더우면 에어컨 트는데 애들이 공부하면서 당연히 틀고 그 정도 예산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교육감님한테도 교육감 하는 동안 그런 것들 좀 신경 써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 해도 안 된다 참.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 누가 깃대를 들고 해야지. 한국 사람들이 묘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나서서 해야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거는 돈이 있니없니 이렇게 하는 모양이대요(D-2, 교수).

2) 아이가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교육도시

교육도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도시면서 아이가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서관을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놀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마트 말씀하셨는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걸 할 때 여유 공간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공공이든 영업을 위한 건물이든, 거기에 공적인 목적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큰 규모는 어렵지만 작은 규모의 도서관 같은 것들을 거기서 문화센터 하듯이. 그런 걸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 그걸 통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D-2, 교수).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음식 재료 들어가는 걸 보면 로컬푸드 몇 퍼센트 넣기,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평가를 할 때, 큰 마트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이 안 해도 될 거 같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는 도서관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된 그런 걸 조례로 하면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거 같거든요(D-3, 교수).

도서관도 좋은데 저는 그냥 놀이하는 공간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은 그나마 마트가 아니고 편의점에서 논답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노는데, 도서관까지 가도록 문화적인 부분들이 연계되는 것도 어느 정도 목표로 하되, 아이들이 갈 데가 진짜 없어요. 그렇게 도서관이 구석구석 많이 생기는데, 요즘 떠들고 놀고 할 수 있는 도서관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저기 가서는 그래도 뭔가 책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마트나 이런 데 공공장소로서, 왜 아이들이 그냥 딴 거 안 하고 놀 수만 있는. 그냥 테이블도 주고, 거기 몇 가지 검색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가게 되고. 노래방 가서, 요즘 아이들 코인 노래방 많이 가고 그렇게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D-6, 교수).

교육 철학을 크게 다잡을 필요가 있다. 아이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부산에서 자라 부산을 자랑스러워하고 부산을 잘 알도록 키우는 것이 부산의 교육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부산시가 교육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크게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핀란드 예를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핀란드에서 10분에서 20분 가량의 숙제를 내거나 아니면 숙제를 내지 않는 이유가 가족을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숙제를 커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덜 내게 되면, 이 교육 철학은 결국은 이 아이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간 제공할 수 있도록 숙제가 내어지고, 그것들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가가 결국엔. 우리 삶이 지금 흐트러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나가서 학생 배치에 대해 학부모에게 받은 의견은 ‘해원초-해운대 자이아파트와 공동학군 반대’ 이렇게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낸 의견을 반영하면 가족 단위의 회복은커녕 마을이 흩어지고 찢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에 인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아이는 부산을 잘 알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부산의 철학이고. 부산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

에서 살아도 서울 안가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산에 살 때 난 이걸 잘 할 수 있었어.’라고 하는 그런 면들이 교육 철학으로 잡아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늘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D-1, 교수).

3) 지방대학교 소멸에 대비한 부산만의 특성화 교육 필요

부산은 도시만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특화된 분야를 만들어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화된 대학교를 유치함으로써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대학교들이 소멸하면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부산 같은 도시는 예를 들면 부산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모두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특이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교육감을 따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안 펴잖아요, 전라북도의 학생하고 부산학생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B-1, 교수).

부산이 빨리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하고, 아침 7시에 나가서 고등학교 두 곳에 고3 선생님들 전부 다 만나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온 건데. 선생님들은요, 이제 부산으로 대학 보낼 생각 안 해요. 경기도 이하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의 대학 교육 철학이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공교화되면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형적으로 경성대·부경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주위에 있던 아파트들이 옹기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교육 철학을 빨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학교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부산에 있는 대학을 오는 거죠(D-1, 교수).

옛날에 한참 얘기하고 다닐 때 생각이 났는데. 부산에 대학교가 24개·23개 정도 되고, 대략

적인 대학 인구가 30만 정도 되거든요. 학생들이 15만~16만 정도 되고, 교직원이니 뭐니 포함해서 한 30만 명 되고. 각 일 인당 백만 원 정도의 일 년 수익을 고려하면, 부산에 일 년에 깔리는 돈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길 했더니 부산의 정책과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 대기업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 너무 정책대상으로 안 삼고 있다는 거고 위가 변하면 그 주위에 변하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보이잖아요. 거의 지금 완전히 공동화됐고, 여기 와서 새로운 타운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구조로 딱 나올 거라고 봐요. 중앙과 지방, 국립과 사립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사립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지금 영향이 오기 시작했는데, 대학교 자체는 전체적인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벌써 개인 과별로 상처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곧 현실화될 거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대학교가 무너지면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는 거라서 심각한 지역 문제가 될 수 있어요(D-3, 교수).

4) 부산에 대한 애향심 교육 강화

부산의 교육정책에 필요한 것은 부산에 대한 애향심이다. 부산시민이 부산에 대해 모른다면, 부산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부산시민은 알 수가 없다. 부산시민이 더 잘 살기 위해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부산을 더 좋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다들 학교·대학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교육의 본질을 보면서 제가 부산시의 교육정책에서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각 학교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정말 부산사람들이 부산을 많이 알까?’. 지역, 그 고향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고향에 애향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부산사람들이 부산을 많이 알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는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부산학센터, 부산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학센터, 그다음에 국제신문사 하다 나와서 걷는 분들. 부산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축한 전문가 집단들만 그 정보를 공유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시민들한테 오진 않

거든요. 특히나 부산광역시도 그렇고 16개 지자체들이 부산을 알기 위해서 하는 용역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을 정말 부산시민들이 아느냐. 제가 얼마 전에 영도에 관련된 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게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면을 다 펼쳐 가지고 100년 된 길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100년 전 당시 영도가 제재염 공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수산업 기지로서, 근데 그 1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공장으로 쓰고 있고. 그 일제 당시의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저게 귀중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근데 그걸 아카이브로 자료 구축하신 분들이 구축해봐도 시민들은 모르고, 지금 내 생활 편리하려고 저거 부수고 새로 좀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 학교 다 필요하지만, 부산을 알기 위해서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 정책을 펼쳤느냐. 그건 되문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부산사람들 부산에서 살자.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또 신도시 계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자치상태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산을 좀 알아가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D-4, 교수).

10. 출산 · 보육

1) 독박육아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부산에서 아이를 안낳는 이유는 독박육아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육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단어다. 때문에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독박육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아기들 어렵다는 것은 독박육아 때문에 애 안 낳을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는 자꾸 있잖아요. 돈만 주면 애기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독박육아 때문에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육아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안낳는건데 우리는 자꾸 ‘돈 줄게, 돈 줄게.’ 해서 돈 내는 정책만 펴고, 재들은 독박육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해주니까 자꾸 애기를 안 낳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A-4, 교수).

11. 보건 · 의료

1)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원 조성

의료정책으로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집 근처에 잠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운동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에 최근에 조사가 있으면, 공원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정도와 공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건강 정도를 체크 해보면 의료비 지출이 운동을 많이 하고 걷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이 적더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을 많이 만들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이미 있거든요(B-1, 교수).

12. 치안 · 보안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치안·보안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지역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셉테드 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 예방 환경설계)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할 경우, 모든 도시에 일괄적인 정책 집행은 시민들에게 체감되기 어렵다.

자 그럼 도시아전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셉테드 디자인 전문가 계신데, 셉테드 디자인을 대부분 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용역 받아서 하더라고요. 저도 매번 평가를 했었어요. 이리저리 지자체별로 갔었는데, ‘나 이거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포맷만 만들어내면 다 똑같이 하나의 그 포맷에 맞춰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부산의 지역적 상황이 다르고, 밀양이 다르고, 거제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셉테드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내

용을, 나중에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내가 ‘헉’한 거예요. 또 예산 얘기해야 하는데, ‘야, 국가 돈 진짜 잘 날리고 있구나.’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2억씩 들어가거든요. 2억에서 3억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열 개만 하면 1년에 20·30억 그냥 버는 거예요. 보고서 만들어주고, 이걸 아니잖아요. ... 도입되는 거 좋습니다. 예방하는 것도 좋고 근데 문제는, 저는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발 지역적 특성은 좀 고려합시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6·25 때도 폭탄 한 발 안 맞은 깨끗한 도시예요. 옛날 일본 신작로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걸 서울이나 대전에다가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해봐야 말짱 소용없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제대로 체감이 되고 싶으려면, 그 지역의 특성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시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시민 체감이 될 수 있습니다(E-2, 교수).

13. 환경

1) 노령화에 대비한 휴게 환경 조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을 향유하며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른 도시들 또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도를 지향하며 개발 정책을 입안할 필요는 없다. 건설 위주의 도시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자꾸 자꾸 노령화만 되고, 의학이 좋으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하고, 젊은 애들은 애기를 안 낳으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노령화된다는 부분은 부산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같은 입장인데, 왜 유난히 부산은 전부 수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놓고 여기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뜻이니깐. 해외 사례를 본다면 캐나다의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은퇴한 분들이 전부 찾아 찾다가 찾아온 게 빅토리아 시티라는 거예요.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산, 강, 바다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제조업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별도로 구축을 해야겠지만 그게 문제라는 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서울보다는 겨울철에 적절히 춥진 않고 여름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시원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사람들과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도시에 각박하게 살아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차라리 부산 쪽으로 계속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거는 확실한데(B-3, 교수).

북항도 처음에는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에서 시작됐지만 다 상업지 아닙니까? 지금. 공원 별로 없잖아요. 공원녹지가 있습니까? 다 상업적으로 다 운영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건설 방향으로 도시를 운영해요. 저는 그런 거에, 앞으로 도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절대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세계적인 도시들을 한 번 보세요(B-1, 교수).

2) 도시 생애주기에 맞춘 녹지공간 조성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각 주기마다 해야 할 과제가 있듯이, 한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포인트가 있다. 현재 부산에 필요한 것은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다.

저는 도시형 숲,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들 가보면 도시에 공원이 많고, 숲에 녹지가 많은데. 부산시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산은 많이 있지만, 실제 도시 공간에는 녹지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눈으로 딱 느끼려고 하려면 도시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B4, 교수).

좋은 도시는 도시에 엔트로피를 줄이면서 사람의 이동성과 좋은 직장,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이다. 즉, 도시 내 녹지공간의 핵심은 접근성의 문제이다.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에 공원이 있어야 한다.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도시를 우리가 직주근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에 엔트로피를 줄이면서 사람의 이동성과 좋은 직장,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죠, 바다를 가려고 해도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죠. 그게 내 가까이에 걸어갈 수 있는 강이 있고 걸어갈 수 있는 바다가 있으면 좋은데 강은 다 뭐예요, 차도가 짝 다 강을 다 막아놨어요, 왜?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강 옆에는 전부 차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차도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 쓰고 가야 해요. 강이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바다에 가려면 바다도 해안도로는 다 도로로 만들고, 광안리 앞에 전부 다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바다에 접근하려면

전부 도로 앞으로 가야 해요. 북항도 개발해봤지만 그건 시스템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시스템이 전부 건축, 도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가 이런 체감형의 걷기 좋은 이런 거를 계획서를 만들더라도 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B-1, 교수).

그래서 공원녹지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생활권 공원과 광역권 공원으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활권 공원이에요. 내가 접근하기 편리한 장소에 공원이 있어야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생활공원 공원면적은 거의 0%예요, 걸어서 5분 내지 10분 안에 걸어들 수 있는 공원녹지가 있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차를 타고 간다든지 30분씩 걸어서 간다면 그거는 공원으로 가치가 없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지 병원이지 멀리 있으면 병원이 아니예요(B-1, 교수).

결론 및 시사점

본 조사는 지금까지의 민선7기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시민 체감형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분야별로 두출하여 이에 대한 문제도출 및 개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6번의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금까지 항만, 물류, 토목, 건설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선7기 출범 이후, 삶의 질과 행복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기존의 개발지향적 비전으로부터 시민의 삶과 행복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첫발로 보인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평가가 갈렸다. 부산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해양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하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해양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 등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해양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부산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나타났다. 분명 부산시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을 가까이서 접하는 내부자들과 달리, 외부자들은 체감도가 낮아 비전의 실현 여부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 대한 다차원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슬로건에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시민 체감형 정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체감되는지다.

그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와닿는 것이 시민 체감형이라는 것에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부산의 시민 체감형 정책은 도시형 숲,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위주의 도시로부터 보행친화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방안을 추진하여 사람과 도로 간 공존을 모색하는 것 또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올해 상반기에 SK가 구미 대신 용인에 60조를 투자하게 된 이유도 결국 수도

권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작정 서울을 따라가는 과밀개발 대신 적정개발·개발억제를 통해 부산만의 도시설계, 즉 적정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거대 광역도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시민 체감형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기지향성과 결과지향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시민은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한번 접근성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점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고려할 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좋은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4년, 5년마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등 난도질을 당하게 된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당파주의를 지양해야 하고, 지역 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직 또는 권위가 필요하다. 물론,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 측에선 알 길이 없다. 따라서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 부산시민의 인지-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겠다.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이루어져야 시민들도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이러한 시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강화 부문에 대해 거버넌스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해야 하며, 이때 소통의 채널은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주인의

식을 가진 주민들과 협력적 정책기획을 함으로써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협치의 관점에서 요구된다.

시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들은 관련 지식은 물론이고 실무경험까지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초선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하기 마련이다.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시·구의원은 단지 표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량이 모자랄 경우, 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질문으로 시·구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물어보았다. 가장 먼저 보좌관 제도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보좌관 제도는 비용의 문제와 정치인에 대한 높은 불신으로 인해 현역 의원들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해야 시민들로부터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선이 대부분인 현역 의원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의회는 정책결정에서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이들의 역할 수행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의 평가 정도를 물어보았다.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다. 초선 의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지금,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이들의 성과를 한눈에 보게끔 편집하여 행정복지센터 등에 발간물 형식으로 배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조례를 만든 의원에게는 상을 수여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시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평가할 때는 깨어있는 눈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초선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 조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사항이다. 특히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의원으로서 당선되며 당장 이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초선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의원의 자리는 역량을 키워주는 자리가 아닌 이미 준비된 사람이 와야 하는 자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원의 자리는 과거 분야별 전문직 출신들이 봉사의 마음을 갖고 적은 보수로 일하였던 만큼, 현재의 의원들 또한 초기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을 지니고 지역주민들 간 끊임없이 소통하여 정책에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의회에 대한 평가가 박한 큰 이유는 단지 특정 정당에서 의회 다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간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의 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독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정활동에서의 당파주의는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사항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에는 사업의 주도권을 마을주민에게 이양하고, 공무원은 보조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공무원들이 주된 역할이 되어 정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마을이 조성되었다. 결국 마을의 원주민이 떠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정책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마을자치회 등 실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마련하면서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은 전부 마을자치에서 출발하는데, 정작 주민들은 마을자치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시의 주체적인 정책 추진 및 집행이 요구된다.

2019 시민 체감형 정책 구상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분석

인 쇄 2019년 12월

발 행 2019년 12월

발행처 (주)세상모든소통연구소

펴낸곳 제이콤 디앤씨

※ 본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함.